第278回國會 (定期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8年9月8日(月)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업무현황 보고
   가. 외교통상부 소관

審査된案件

1. 업무현황 보고 ····· 2
   가. 외교통상부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이성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진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견례를 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첫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했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구상찬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여러 선배님 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한나라당의 남경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한나라당 수원 팔달 출신 남경필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한나라당의 안상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 委員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윤상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이범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이천·여주 출신 이범관입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이춘식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춘식 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춘식입니다. 앞으로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정옥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옥임입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같이 외통위에서 일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회기에는 통일외교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통위에서 초당적인 협력이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 이회창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會昌 委員 이회창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외교통상부를 시작으로 소관부처별 업무현황 보고를 듣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업무현황 보고

가. 외교통상부 소관

(10시16분)

○위원장 박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현황에 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입니다.

먼저 18대 국회 상반기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축하드리며 첫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여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창조적 실용외교를 통한 성숙한 세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만큼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외교통상부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고 이어서 우리 부 현황과 현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그다음은 권종락 제1차관입니다.

다음에 신각수 제2차관입니다.

다음에 이순천 외교안보연구원장입니다.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이용준 차관보입니다.

임재홍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준 다자외교조약실장입니다.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입니다.

이혜민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입니다.

그다음에 문태영 대변인입니다.

조현 에너지자원대사입니다.

정래권 기후변화대사입니다.

오갑렬 재외동포영사대사입니다.

그다음에는 노광일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어서 조태영 동북아시아국장입니다.

이경수 남아시아대양주국장입니다.

장호진 북미국장입니다.

두정수 중남미국장입니다.

김은중 유럽국장입니다.

김진수 아프리카중동국장입니다.

다음은 신동익 국제기구정책관입니다.

이어서 박강호 개발협력정책관입니다.

황승현 조약정책관입니다.

배재현 문화외교국장입니다.

이정관 재외동포영사국장입니다.

이태호 다자통상국장입니다.

안총기 지역통상국장입니다.

최재철 국제경제국장입니다.

이어서 최경림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입니다.

박효성 자유무역협정교섭국장입니다.

배긍찬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입니다.

조정원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장입니다.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입니다.

허철 평화외교기획단장입니다.

조윤수 부대변인입니다.

최종문 조정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박석환 의전장하고 이재붕 감사관은 해외출장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시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외교통상부의 조직 예산 현황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쇄해서 배포해 드린 외교통상부 현황, 누런색깔의 자료를 참고로 하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내로 보고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의 본부 조직은 장관 제1·2차관, 차관보, 2실, 의전장, 대변인, 3대사, 8국, 3정책관, 감사관, 2기획관, 8심의관, 1협력관, 65개과와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을 담당하는 통상교섭본부에는 본부장, 조정관, FTA교섭대표 이외에 5국, 3심의관, 21과가 있습니다.

또 한시기구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있으며 소속기관으로 외교안보연구원과 154개의 재외공관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원현황입니다.

현재 본부 인원은 975명과 재외공관 인원 948명을 포함해서 총 19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에는 외교통상부 직원 외에 23개 정부기관으로부터 265명의 주재관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재관 현황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망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88개국과 수교하여 109개 상주대사관과 41개 총영사관 그리고 4개 대표부를 포함해서 총 154개의 재외공관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비교할 때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3000명 이상, 160개 이상의 재외공관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는 그 나라들 외교인력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외교 업무 수요 증가 및 외교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서 외교인력을 최소한 3000명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예산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11.2% 증가하였습니다만 주로 증액된 예산은 국제기구분담금 개발도상국 무상원조 등 대외협력비 증액에 기인합니다.

다음 8페이지 그림을 봐 주시면,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1조 1678억 원으로 구체 내역은 인건비가 2200억 기본경비가 2059억 원 사업비 7400억 원 등입니다.

사업비 예산 구조도를 보시면 무상원조와 국제기구분담금 등이 대부분입니다.

순수한 외교부 사업비는 559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2008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은 정부 예산의 0.6% 즉 180분의 1 수준이며 이것은 OECD 회원국 외교부 예산이 대략 우리의 2배 정도라는 것을 비교할 때 좀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참조하셔서 구체 예산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책자 11페이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2008년~2012년 4년간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 증대, 그리고 영사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민 만족 영사 시스템의 구축,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를 주요 목표로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특히 에너지 외교를 위한 1000억 원, 재외공관 행정원 인건비 및 임차료 현실화를 위한 기본경비 1000억 원 등의 증액을 역점에 두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2012년까지는 성숙한 세계 국가 달성 및 외교 선진화를 위해서 정부 예산의 1%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교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북핵 문제, 남북문제, 한반도 인접 4국과의 관계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 강화 등 6개 분야로 나눠서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문제, 남북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해서 정부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와 6자 외교장관회동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비핵화 2단계의 마무리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신고서의 검증을 위한 의정서 합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던 중,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연기에 반발해서 8월 26일 불능화 조치 중단을 발표하고 9월 2일부터는 이러한 불능화 조치를 통해 제거되었던 영변 핵시설의 일부 장비를 다시 원래 위치로 이동시키고 폭파된 냉각탑 잔해를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최근 상황 변화가 북한

비핵화 진전 및 6자회담 과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김숙 본부장이 9월 5일부터 7일간 중국을 방문해서 각국 수석대표들과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번 협의를 통해서 우리를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은 모두 북측의 영변 핵시설 복구 관련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성급한 과잉 대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관련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조속히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또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인권 등 북한 관련 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한반도 인접 4국과의 관계 강화입니다.

먼저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외교부는 대미 관계에 있어서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동맹 발전을 추진하고, 동맹 재조정 사업 및 현안의 원만한 추진·해결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전략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과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이전·재배치 및 동맹 강화 및 재조정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 방위비 분담의 취지와 우리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분담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금년 11월 예정인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차기 미 행정부와 한미관계 강화 및 주요 현안 관련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일본 관계입니다.

정부는 독도 문제는 영토주권에 관한 사안으로서 단호하게 대처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훼손 기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독도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국제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독도 표기 오류 시정 등 홍보 노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형성된 한일 간 우호협력 관계가 일본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경색되었습니다. 최근 후쿠다 총리의 사임 의사 표명에 따라 새로운 내각이 조만간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본 내각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대중국 관계입니다.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금년 5월 대통령 방중 시 합의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면서 양국간 잠재적 갈등 요인을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5월 대통령 방중 시 합의한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 측과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8월 후진타오 주석 방한 시 합의한 정치, 경제, 인적·문화적 교류, 지역 및 국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 문제 및 남북 관계 관련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면서 양국간 잠재적 갈등 요인인 역사 문제, 국군포로·납북자·탈북자 문제, 또한 양국 국민 간 서로에 대한 부정적 정서 등이 양국 관계 발전의 큰 틀 속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러시아와는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준비코자 합니다.

대통령님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에너지 자원, 우주기술, 극동시베리아의 개발 등 제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해 갈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범아시아권에 대한 협력외교를 주축으로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EU,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과의 글로벌 외교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 9개국의 총리급 이상의 외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30개국과 정상외교를 펼친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 강화를 위해 아세안, 중앙아, 중동, 중남미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ASEAN 센터를 설립하고, 내년도에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과의 교류협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한·아랍 소사이어티, 한·중남미 경제협력 포럼, 한·중앙아 경제협력 포럼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다자외교 무대, 즉 10월의 ASEM 회의, 11월의 APEC, 12월 ASEAN+3 정상회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제사회 기여외교의 확대입니다.

먼저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UN PKO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21세기 UN의 대표적 활동이나 우리는 UN PKO 납부 순위 10위이면서도 파병 규모는 PKO 참여국 119개국 중 37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PKO 참여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PKO 파병 관련 국내 절차의 법적·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 국민총소득 대비 약 0.1%의 ODA 규모를 2012년에는 0.15%, 2015년에는 0.25%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원조 체제의 중추적 기구인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2010년까지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제·통상 외교입니다.

외교부는 FTA의 전략적 확대 및 에너지 외교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FTA의 전략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 한미 양국 대통령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 조기 발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거대경제권 및 자원부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인도와는 금년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입니다. 이러한 협상이 양측 간 이익의 균형이 추구되는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취약한 에너지 안보 여건을 감안해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상급 에너지 협력외교 및 해외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73개 에너지 거점 공관을 지정하고 6개 에너지 공관 신설 등 자원협력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외교를 전개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외여행 및 체류할 수 있도록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및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외교통상부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나중에 도착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지난번에, 그리고 오늘 상견례 인사 말씀을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인사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하신 것으로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문학진 간사님!

○문학진 위원 민주당 문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18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져서 상임위가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는 다가오는데 국감 준비들 하느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즘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각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저희 방도 마찬가지이고 자료제출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제출이 빨리 되질 않습니다. 물론 외교통상부의 사정도 있겠지만 위원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날 저희 상임위에서 자료제출을 의결하게 되는데, 의결하기 전에 통상 각 위원들이 수감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걸 나중에 한데 모아서 상임위에서 의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에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진 지금 문학진 간사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업무가 지금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가급적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셔서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진영 위원님!

○진영 위원 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제가 기대하기에는 업무보고 중에 한미 FTA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 가지고 자세한 설명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여기 보면 한 두 줄, 세 줄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이 한미 FTA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한미 FTA에 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보고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FTA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이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FTA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또 추가질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외교통상부에서 우리 전 간부가 다 참석을 해 계신데 지금 1차관, 2차관 두 분이 다 계신데 아마 외교업무 일정 때문에 신각수 제2차관께서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차관님 두 분이 다 앉아 계신 것보다 한 분이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각수 제2차관께서는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 외교부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요청을 해 주셨는데 이 방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를 지금 페트병에 담아서 준비해 놓고 있는데 물을 좀 드시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위원장으로서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교부 간부님들도 물을 드시면서 편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음료수병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간사회의를 통해서 한 분의 질의시간을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조정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역시 7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환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서울 강동갑의 김충환 위원입니다.

한나라당 위원입니다.

먼저 한미 FTA가 계획대로 이번 부시 정권의 임기 이내에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대선

결과를 보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자 이런 주장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로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 또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이 FTA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은 현 정부로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월 4일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 약 3주간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것을 통상 레임덕 세션(lame duck session)이라고 그러는데 주요한 예산 관계 현안을 국내적인 이슈에 국한해 가지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마는 금번에는 한미 FTA를 레임덕 세션에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현 부시 행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 의회를 설득하고 있고 또 저희들로서도 체계를 동원해 가지고 한미 체계…… 민간 레벨에서도 한미 FTA를 통과시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이익에 공히 부합된다 하는 측면을 부각시켜 가지고 여론을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몇%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충환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은 미국이 노력하기 때문에 잘되기를 바란다든지 되면 좋고 또 안 되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입장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현 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아주 중요한 운명이 걸렸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확실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독도 및 동해 지명표기가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한국에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전보다도 지금은 거의 전 세계 다수의 지도라든지 또 인터넷 표기가 다 일본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조용한 외교방침을 고수하면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인식이 어떠한 것인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독도·동해 표기 문제는 외교부뿐만 아니고 관계 부처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립지리원에서도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그다음에 2006년에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이 독도·동해 표기 전담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독도연구소를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도 가급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독도·동해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배가할 계획입니다.

○김충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과가 예를 들면 반크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2005년 조사 때는 2만 5000개이던 '리앙쿠르 암석' 표기가 2008년에는 3만 8500개로 54%가 증가했고 또 동해도 일본해로 된 것이 95만 9000개이고 동해 표시는 36만 7000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그런 현재와 같은 노력 정도 가지고는 점점 더 일본에 유리해지고 있는 세계적인 표기가 중지되지 않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정부로서도 그런 문제점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더욱더 노력을,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통해서 노력을 배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내년에 보고할 때는 이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영유권 공고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외교부가 하는 것을 보면 외교부의 직업외교관들이 하는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한 것을 전부 뒤집어 가지고 조선인이 창씨개명을 바랐다, 또 일본이 한글 보급에 공헌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장관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장관은 이런 좀 용기 있는 표현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좋다,

실질적인 영유권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국민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는가 저는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영유권 공고화 조치를 용기있게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독도 영유권 공고화 문제는 외교부로서도 역점을 두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그동안 독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독도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외교부가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좀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영유권 공고화 조치에 대해서 앞으로는 한 가구 두 사람이 사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 가구가 여럿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거기에 관광시설로서 일정한 수준의 호텔 같은 것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독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미 벌써 독도지속가능개발법이라는 것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 개발법에서도 보면 독도의 환경보존, 생태계 보존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보존을 훼손하지 않는 한 우리가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지금 관계 부처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다른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학진 간사께서 자료제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외교통상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방식으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상천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민주당의 박상천 위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할 것인지, 특히 세계식량계획의 대북한 식량지원 요청을 수락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통일부 소관일지 모르나 한 부처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이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식량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돕는 일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 역할을 해온 수전 솔티 미 디펜스포럼 대표도 '식량지원은 절대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셋째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내려온 우리 정부의 방침이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립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원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영변 핵시설 재건 시작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지켜간다면 남북 간에 신뢰도 증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께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새 정부도 인도적인 대북한 식량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기회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WFP에서 요청한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기간이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 어느 정도의 식량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지금 관계 부처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북한에 대

해서 5만t의 식량지원을 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북한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없이 간접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 측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은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지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고……

○박상천 위원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까? 지금 그렇게 급박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정부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현재는 추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국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고 식량기구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자체적인 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러면 왜 WFP는 이것이 급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여기서 지원기간이 금년 가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이전에 우리가 지원계획을 밝히고 춘궁기는, 내년 봄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비밀관리보호법안, 여기에 비밀의 범위를 기존의 국가안보 관련 비밀 외에 통상, 과학, 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개발 등을 추가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안보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상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은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통상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층 간에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밀로 분류해 버리면 국민들에게 정보가 차단되어서 합리적인 비판과 여론수렴이 어려워집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기 때문에 통상 관련 정보를 비밀로 분류해서 통제하려 한다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협상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면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협상에 활용될 수도 있고, 상대측에 대해서 우리 국내 사정을 명분으로 삼아서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밀로 분류해서 차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지금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이 늘상 상대편과의 협상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들께 알려서 그 내용에 대한 사전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도하게 알려져서 협상전략이 상대편에게 노출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또 전체 국익에 훼손이 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아마 그러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정부 안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쪽 다 그럴 만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는 결국 정부와……

○박상천 위원 이걸 법안에 그대로 둘 것인지 통상 부분은 삭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교섭본부가 적극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걸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박상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이회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會昌 委員 아주 애들 많이 쓰시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 외교(한국 외교)의 기조와 기본방향이랄까, 외교의 철학과 방향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위원회 회의는 정권이 교체된

후에 이명박 정부의 첫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교체된 정권의 '한국 외교의 방향은 어떤 것이다. 또 기조는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 설명이 됐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네요.

간단하게 뭐 보면 대미외교 있고 또 대중외교 있고 대일외교 있고 부분적으로 있지만 전체적으로 새 정부가 '앞으로 외교의 기조와 방향은 이런 점으로 잡고 있다. 철학은 무엇이다' 이 점에 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 만일 준비가 충분치 못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가부간에 좀 대답을 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우리 외교의 기본방향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성숙한 외교, 선진국가 창조, 창조적 실용주의를 통한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소위 글로벌코리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외교도 그러한 큰 지향점을 가지고 4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세안, 중남미까지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혀 간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회창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구두로도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會昌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실용적'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실용외교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한 국가의 외교 철학이 될 수 없고 외교의 기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용주의를 가지고 외교의 기조라든가 방향으로 설명한다면 한마디로 우리 외교의 방향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한미 관계이고 그다음에는 대중외교이고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협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협력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낀 것이 지난번 ARF 총회에서 우리가 금강산 총격 사건에 대한 문구 삽입을 요구했는데 북한 쪽에서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니까 양쪽이 다 빠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양쪽이 다 무승부가 아니라 우리의 판정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알기를 북한은 고립되어 있고 또 은둔 국가이고 해서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훨씬 더 다변화되고 그리고 아주 실효적인 그런 외교를 해 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 주변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우리 외교의 철학과 기본방향에 대한 것을 반드시 외교통상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의 많은 유능한 분들 제가 존경하지만,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단순한 기술자나 실무가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외교통상부는 국가의 기본방향과 외교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 외교의 미래를 열어 가는 그런 부서가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작하셔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외교통상부가 '외교'와 '통상'으로 합쳐 있습니다. 제가 1994년에 총리를 할 때에는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당시 UR협상 과정을 겪으면서 아마도 합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합쳐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여기에 나와 계신 지금 간부들,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또 통상을 담당하고 계신 김종훈 대사 모두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외교와 통상을 합친 현재의 조직체계가 잘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잘됐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 외교관 출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보면 과거에 우루과이라운드 또 최근의 쇠고기 협상 과정을 통해서 보면 외교부 출신은, 외교관은 협상의 협정 내용이나 또는 실제 협상에 있어서 줄다리기하는 것 같은 것은 물론 아주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협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대목,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대목을 얼마나 우리 쪽을 위해서 확보하고 따오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그 부분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확보하는 과정과 나중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그러한 전문가적인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전부다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체로 잘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통상산업분야 또는 기타 실무부서가 그 부분에 통상전문가를 동원해서 참여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쇠고기 협상에서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객관적으로 외교부와 통상부를 합친 현재의 조직체계를 좀더 다시 반성하고 고치거나 또는 개선할 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지금 자원외교가 강조되고 있는데 자원외교하고 에너지외교가 다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자원은 에너지뿐만 아니고 광물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포함돼서 좀 광범위한 겁니다. 에너지를 포함한 것이 자원외교입니다.

○李會昌 委員 아니, 저는 용어 차이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교통상부에서 자원외교라고 말을 쓸 때하고 에너지외교라고 말을 쓸 때 그걸 구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에너지·자원 외교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李會昌 委員 총리실에서는 '자원외교'라는 말을 쓰고 또 외교통상부에서는 '에너지외교'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자원외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李會昌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자원외교 필요합니다. 총리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일인데, 그런데 보면…… 특히 외국공관이나 필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 부서를 늘리는 쪽에 보다 좀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자원외교 확충 수단으로 자원외교공관을 6개 한다 했는데 그건 어디어디를 말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IMF 때 폐쇄가 됐던 공관이 많습니다. 그때 12개 공관을 폐쇄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에 총영사관 1개, 그다음에 폐쇄했던 볼리비아……

○李會昌 委員 시간이 됐으니까 그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자료로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남경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유명환 장관, 그리고 외교통상부 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가안보전략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60주년 기념 외교 세미나에서 '성숙한 세계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합리적인, 실용적인 전략적 외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왠지 모호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또 지적 나온 대로 철학과 방향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MB독트린이 후보 시절에 있었습니다. 이건 선거공약이었고요. '비핵 개방 3000' 구상과 같이 상생·공영 대북정책으로 이것이 구체화된 것처럼 MB독트린도 재검토해서 국가안보전략으로 굳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항상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어느 부처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게 한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경필 위원 제 판단에는 이런 철학과 방향·중장기 목표·구체적 정책, 적어도 정부 출범 1년 정도 시점에는 우리의 안보전략지침서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떤 부처를 딱 지정해서, 담당을 지정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가 과거에 어떤 정부도 못했던 그런 것을 2004년 3월 1일에 국가안보전략을 문서화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그 내용의 적절성과 성과를 떠나서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공표한 최초의 노력은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ABR이다, 'Anything but Roh'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저는 정책의 연속성 또 공을 인정하고 과를 극

복해서 창조적 외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something from Roh',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좋은 전략에 대해서는 받아올 필요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러나 그 가운데 과거 친미·반미 논쟁이 일어났던 것 또 동북아 균형자론 같은 적절치 못한 이런 이념과 정파를 떠나지 못한 이런 논쟁이 일어났던 것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국가전략을 만들려면 아마 정부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1%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몇 %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0.06%, 180분의 1입니다.

○남경필 위원 지나치게 적은 액수인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예산 1% 확보를 공약으로 해놓고 결국은 임기 내에 지켰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계신 가운데, 아마 여기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은 모두 공통적 인식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먼저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의지가 확고히 다져져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께서 문화일보 9월 3일 인터뷰하신 것 보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뭔가 조정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5 t 지원을 우리가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지금 답변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차관입니까, 무상지원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무상입니다.

○남경필 위원 그게 지금 한 200억 원 정도의 예산 정도가 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남경필 위원 지금 정부 내에서 대북 식량지원, WFP를 통한 식량지원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나오겠습니까? 지금 유보상태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것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남경필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봄이 아마 식량 사정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답변도 해 주셨고 그런 판단을 정부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WFP의 지원계획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쌀이나 옥수수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서 식품을 가공하고 영양소를 만들어서 이것을 북한에 15개월 동안 나눠서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야 효과적인 지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미국에서 50만t에 해당하는 곡물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자체 평가로서도 한 110만t 정도가 연간 부족한데 저희들이 식량 수급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기아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정부가 조금 어렵다면 애당초에 5만t 지원하기로 한 200억 원 그것부터 WFP에 먼저 지원을 하고 점차로 6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북핵이 지금 굉장히 경색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시료채취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 지난 15년간의 북핵 협상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찰 단계로의 진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북한은 의제를 잘라 보상을 극대화하는 살라미 전술, 극한 전략, 여러 가지를 구사해 왔고 또 강경일변도 정책 고수하다가 뒤늦게 협상으로 나선 부시 행정부, 이런 협상전략은 별로 얻어내는 것이 없다.

또 실제로 6자회담이 있지만 북·미 간에 양자협상 형태로 가고 있고 또 미국 대선 정국이 되

면 시간 벌기로 나간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부시 정부가 임기 말까지 검증체계 합의를 목표로 매진할 것이고 북한으로서도 부시 정부가 끝나기 전에 테러지원국 해제만은 받아 내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요 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창조적 외교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것이 가능할 것이고 어떤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말 김숙 본부장이 북경에서 한미, 한중, 한·미·일, 각 단계 협의를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외교적 노력을 그만큼 더 배가해서 북한을 설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남경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 委員 이번에 제가 미국을 한 열흘 갔다 왔는데 현지 상황을 보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이래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금년에 미국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내에 비준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관해서 미국 측을 좀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 수단으로서 본회의 통과를 먼저 해 놓고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먼저 통과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미국 측을 좀 압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본회의 통과는 미국 측의 의회 사정 또 정당,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을 고려해 가면서 기다리면서 적절하게 협의해 가지고 통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 외교통상위원회부터 먼저 좀 통과를 시켜 놓고 미국 측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겠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FTA 국내 전략과 관련해서는 저희 외교부 입장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교통상위원회에 통과를 시킨 다음에 미국의 동향을 봐 가면서 우리 본회의 통과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방향이 좋으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安商守 委員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한국 국회가 먼저 처리하면 미 의회 설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봐도 우리가 먼저 좀 통과시켜 놔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교통상부에서는 재미교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각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의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미 FTA 지지 의원들에 관해서, 특히 민주당, 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재미동포들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단체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미국 의원들하고 친한 관계를 좀 확인해 가지고 통과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安商守 委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 또 우리 남경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말이지요, 지금 나는 우리 정부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표 시절인 금년 3, 4월에도 식량만은 이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먼저 주고, 화끈하게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봐도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무슨 북 측의 요구가 없다 이런 이유로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하는데 지금도 장관의 답변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이지요. 기아 상태에 있는 지금 약 620만 명가량 되는 북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 11월까지 5억 300만 달러 상당의 식량 63만 t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공식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식량계획, 유엔 산하기구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달 19일 한국 측에 600억 상당의 옥수수 15만t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식 입장을 지금까지도 미루어 오고 있습

니다. 금강산 피살사건이라든지 북핵 불능화 중단사태라든지 간첩 원정화 사건 등에 따른 국민감정, 여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고려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이 또 자기 체면 때문에 구걸하는 것 같아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면 세계식량계획(WFP)에 우리가 주려고 하는 옥수수 또 식량, 이것 그쪽으로 주어서 거기서 주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또 안 그러면 우리 민간단체들도 있으니까 민간단체를 통해서 북에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몇 달이고 지금까지 계속 검토 검토 검토, 앞으로 얼마나 검토해야 주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세계 유엔 산하기구도 이렇게 해 주는데 같은 동포인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인색하게 보이겠습니까? 그것 빨리 결단 내리세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또 검토인데 검토하지 말고 지금 그냥 결단을 내리세요. 그것 뭐 어려워요. 기왕 줘야 할 것 그냥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WFP를 통해서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잘 알겠다는 것은 빨리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관계 부처가 여럿이기 때문에 저희가 곧 조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관계 부처 조정 어쩌고, 검토 이러면 사실은 또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해 가지고 이것만은 좀……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인색하다는 소리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측면에서 이것은 화끈하게 좀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잘 알겠다는 것은 빨리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인구의 60%가 지금 하루 두 끼 이하의 식사를 할 만큼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야지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식량도 지금 한 200만t 부족하다는데 그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앞서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이것은 체면이 서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굶는 것은 살려 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북한이 기아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에 1만t이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평균해서 한 500g 정도면 되기 때문에 한 350만t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수확량하고 미국이 50만t 주는 것하고 국경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계산을 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워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安商守 委員 계산 복잡하게 하지 말고 빨리 좀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외교통상위원회에 와서 이 문제를 다루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과연 당사자의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게 됐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 해결이 6자회담을 통해서 행동대 행동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고 또 2단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선 핵폐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핵·개방·3000'을 천명하면서부터, 또 그리고 남북 정상 간에 체결된 6·15 또 10·4 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함으로 해서 실제로 북한이 통미봉이,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통하지만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통하지 않겠다 하는 정책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그러한 관계가 서로 됨으로 해서 남북 간에 경색을 가져왔던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6자회담을 통해서 어렵게 합의된 북핵 불능화 프로세스에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협상력을 약화시켰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불능화 프로세스를 부정하는 이러한 '비핵·개방·3000' 계획을 폐기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폐기를 완전히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거기 비례해서, 북한이 핵폐기의 과정에 비례해서 우리도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지원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은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6·15, 10·4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포함해서 그 동안에 남북한 간에 합의를, 같이 테이블에 올려 놓고 협의하기 위해서 당국자 간 회의를 하자고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호응해서 이러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선후를 가려서 이행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경 위원 장관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비핵·개방·3000이 나왔을 때 그것이 선 북핵 폐기론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입장인 것은 맞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핵·개방·3000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3단계 북핵 폐기 이행이 될 경우 우리가 그것을……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먼저 선 핵폐기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선 핵폐기라는 것은 핵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핵폐기 과정에 들어갔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은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 북한한테 그동안에 오해되는 대목을 했다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장관께서 또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리고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외교통상부에서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정부가 차기 미국 대통령후보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또 한나라당하고 좀더 기조가 같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그냥 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여러 가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미대사관 뿐만 아니고 본부에서도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고 또 인맥도 파악하고 있고 접촉도 하고 있고 활발히 지금 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하는 것에 따라서도 외교의 정책이 좀 달라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은 같겠지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료 요청을 제가 해 놓았는데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 분석 자료,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리고 FTA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자동차 부문 등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부시 정부가 끝나기 전에 빨리 먼저 비준해야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도 있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꼭 자동차 재협상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행법안 24개를 다 별도로 심의하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미국에 압력을 준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하자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데 그게 뭐 미국에 압력이 될 것인지, 실제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국에서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의회 비준 가능성이 낮은데 이 일을 기회로 해서 오히려 비준을 미루면서 피해산업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대선 이후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견해도 다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참고해야 될 게 아니고 사실은 입장을 가지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지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

은가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FTA를 동시 다발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유리한가, 옳은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더 요구하고, 여전히 자료 요청하겠는데 현재까지 여러 나라들과 하고 있는 각국과의 FTA 추진 현황에 대해서 22건의 자료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이미경 위원님, 어떻게 질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이미경 위원 예.

지금 FTA 추진 현황 일지를 살펴보니까 상대국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작업으로 보통 협상과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연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회의록이나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이렇게 동시다발로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또 각국별로 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갖는 장점들, 이것을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문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현 위원 반갑습니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입니다.

우리 국위를 선양하시고 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애쓰시는 우리 외교부 장관님, 또 여러 고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중국화에 대한 몇 말씀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EU의 FTA 관계, 그리고 ODA에 대한 차별화 관계,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생태평화 협력에 관한 것 중심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친중국 위성국가 탄생론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과 통일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친중국 위성국가로 탄생될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 못 봤습니다.

○문국현 위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는 남북한이 당연히 통일되기를 바라고 그 시기가 얼마 걸리든 통일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한반도와 한민족한테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일부에서는 친중국 위성국가 탄생론까지 나오고 있고 제가 어떤 회사의 아시아 회장을 하면서 북한을 가보거나 중국을 가보거나 의외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국내에 와 있는 외국 외교관들도 그럴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국민은 그럴 가능성은 전제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가?

특히 6자 회담의 주도국이 주로 중국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외교적으로나 또 기타 문화적,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가 개발하던 나진·선봉 항구가 중국에 장기 조차(租借)되고 북한 자원들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우선 할양(割讓)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주변 4강과의 대외 전략이라든가 또 대북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특히 미국과 북한의 수교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북한은 지리적으로나 현재 경제적으로나 국제 외교적인 여건 때문에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만일에 제2의 가설, 통일한국이 아닌 친중국 위성국가 탄생론이 조금이라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수모요, 감당할 수 있는 피해인가? 이것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국민에게 너무 편식하지 않도록 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또 한반도의 일부로서 한민족의 일부로서 남도록 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문서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다음에 저는 한·EU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과의 FTA보다도 어쩌면 한·EU FTA가 국민적 지지를 더 빨리 받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더 가속화하시면서 연말 내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시는 게 한미 FTA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국민적 합의, 피해산업에 대한 선별,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을 만들어 내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런 FTA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살릴 수 있는 통상을 통해서 FTA를 통해서 독일과 우리, 또 유럽국가들과 우리의 부품소재 기술 증대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도 200억 불 가까운 무역흑자가 400억 불 500억 불도 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의존도가 너무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중국 이런 데 의존하고 있는 것을 국산화함으로써 무역흑자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원산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는 바로잡힐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한·EU FTA를 가속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문국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에 대해서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특히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을 받아 내시는 것이라든가 또 농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이것을 우리 농산품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타 부처하고 협력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도 그러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 계획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인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5년간 국제사회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유엔과 많은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외교부에 계신 분도 우리 온 국민이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사실 ODA라든가 글로벌 컴팩(Compact)의 참여도를 보면 아주 미약하거든요. 글로벌 컴팩에, 유엔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이 추진하는 것에 우리나라의 가입 기업이나 대학이 200~300개는 돼야 될 텐데 현재 그렇지가 않은 것, ODA가 지금 이 수준에 있는 것, ODA의 전략적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걱정이 되고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UNEP 생태평화대학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UNEP 생태평화대학은 이미 국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연계하면서 ODA의 철학과 가치와 차별화를 이 생태와 평화 쪽에 맞추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진 질의 마무리하시지요.

○문국현 위원 관련해서 본다면 북한의 조림이라든가 몽골의 황사 방지 내지는 사막화 방지가 사실은 ODA와 연관해서도 쓸 수가 있고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그것이 결국은 중국에도 영향을 주고 서부아프리카의 사막화라든가 이런 데 대한 하나의 국제적 노력을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교가 새로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녹색 평화, 글로벌 외교를 지향하시면서 그 생태평화대학원을 한국에서 만들고 북한과 몽골을 연결하는, 또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좋은 구상이십니다.

○위원장 박진 문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윤상현입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일단 인도적 지원은 북핵 문제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때 세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작황상황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우선이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1년에 필요로 하는 식량이 540만 t입니다. 올해 식량 부족분이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한 100만 t 정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북한에게 주기로 한 것이 50만 t이고 남포항에 첫 선적분이 3만 8000t이 들어갔고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적인 동의입니다. 국민적인 동의하에 어떤 잠재적인 동의하에 여건, 예를 들어서 식량지원의 양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고려 사항은 식량 분배 투명성 확보입니다.

지금 WFP에서 식량 모니터링 요원을 45명으로 늘렸다 하더라도 우리 인도적 식량지원이 군사 전용미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를 못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북핵 문제를 보면요, 아무리 연계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이 8월 26일 북핵 불능화 중단 선언을 했지요. 그리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고려한다고 했고 9월 3일 실질적으로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핵공갈을 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당장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바로 그 점때문에 모두에 양과 시기,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북한 식량난이요, 식량난이라고 얘기하지만 각 기관마다 평가가 다릅니다. 1990년대 초반에 가장 작황상황이 나쁠 때 그때 100만 명, 200만 명이 기아선상에 있었다, 그 상황하고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그 정도의 아사상황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시기와 양과 방법, WFP를 통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변 핵시설 문제에 있어서 검증 프로토콜, 검증 합의서가 채택이 안 되어 있지요?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이 제일 거부하는 게 영어로 사이트(Site) 시찰이라고 그랬습니다. 합의하기는 사이트를, 가 보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을 우리 측은 단순한 가 보는 게 아니고 가서 검증을……

○윤상현 위원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검증해서 샘플을 채취하고 미신고시설에 가 볼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운 쟁점입니다.

○윤상현 위원 어려운 쟁점인데 저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대폭 양보를 얻어 내는 방법, 작년 BDA 해결될 당시 방식으로 해서 대폭 양보해서 부시 행정부가 어떤 외교적 업적을 남기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북한이 계속해서 오바마의 당선을 학수고대하면서 시간끌기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러면 이 검증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딱 한 가지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대폭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폭 양보하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부시 행정부가 외교적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 민주당으로 정권이 가든 공화당으로 가든지 간에 일단 북한 핵공갈에 대해서 어떤 굴복을 하지 않았다는 부시 행정부만의, 부시 외교의 어떤 Legacy(유산)을 남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대책을 확실히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지금까지 생산했다고 하는 과거 핵무기가 오바마 상원의원이 유럽 방문 중에 8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과거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도 못하고 정말로 북한 핵을 이고 가는, 안고 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FTA 관련해서 FTA 조기 비준 문제, 우리가 조기 비준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쪽 상황을 봐 가면서 비준할 것이냐 하는데 저는 미국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우리가 빨리 비준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님 계셨지만 우리가 일단 작년 4월 한미 FTA 체결했을 때 자동차 협상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지난 연도 보니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수입하는 게 5000~6000대밖에 안 됩니다. 달러로 1억 500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 미국에다 수출하는 자동차 대수가 78만 대, 87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대미 무역흑자의 3분의 1이 자동차에서 옵니다, 자동차.

그래서 지금 자꾸 오바마나 낸시 펠로시나 자동차 재협상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자동차 재협상 얘기가 나오지 않게 우리가 선수 치는 의미에서라도 빨리 조기 비준을 해야 한다, 뭐 미국의 상황을 봐 가면서 고려해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되도록 빨리 의회에서 비준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그 문제도 고려하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죄송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현안 문제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잘 정리가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불행한 우리의 현실 때문에 지금 국내적으로 이념갈등이 심화돼 있고 또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 국익에 막대한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바쁜 때입니까?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여야 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소모적인 논쟁을 마치 국민의 정서를 자기 쪽으로 이끌어서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이런 것이 저는 참 불행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관계 정책 수립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책 목표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 목표이고 또 하나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기본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북한의 전략에 끌려 다니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 목표는 말할 것 없습니다.

평화적인 남북통일, 여기에는 우리 국민 전체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이든 경제적 지원이든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 이외에 문화예술 종교체육 등 다방면의 남북 교류 또는 남북 주민 간의 이해 증진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지금 핵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의 못된 행동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 이런 것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런 것은 다 수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단에 해당하는 대북 지원이 무슨 목표인양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했다는 이 정권은 마치 이 목표만이 대북 정책의 목표이고 이것이 평화적 통일의 종착역인양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퍼주기식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 너는 반통일 세력이고 반평화 세력이고 전쟁불사 세력이다, 이런 식의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이범관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런 대북 문제로 인해서 남남 갈등이 심화됐다면 그것도 불행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여야가 다 한 목소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이런 퍼주기식 대북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반통일, 반평화, 전쟁불사 세력처럼 이렇게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이범관 위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도권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 다니고 일방적인 대북 지원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의 향상에 얼마나 보탬이 됐습니까?

오히려 북한의 지배계층과 국방력 강화에 전용

이 됐다는 의심이 갈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지금 우리한테 뭘로 와 있습니까?

지금 핵이라는 협박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지만 수단에 너무 얽매여 갖고 과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앞으로 남북 간의 그런 교류 증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다음은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7400여 억 수준에 이르고 이는 국방 예산의 2.78%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를 총액으로 결정하고 일정 지표를 토대로 매년 분담금이 증액되고 또 상세한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에 열린 내년 이후의 분담금 협상에서 미 측이 물가인상 수준인 2.5%의 6배에 가까운 14.5%의 증액을 요구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이 실제 전투력 증강사업에는 사용되지 않고 미군 주둔의 편의를 위한 시설에 주로 사용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우리가 방위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91년에는 전투력 증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CDIP,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이라고 합니다.여기에 34%, 군수분야에 31%가 사용됐는데 이 분야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서 작년과 올해에는 소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에는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경위가 좀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또 그것은 줄어드는 반면에 인건비는 16.8%에서 42.6%로, 군사시설비라는 이 애매한 항목은 17%에서는 35%까지 비중이 증가됐습니다. 군사시설비의 사용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고, 구체적 내역은 지금 바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특히 CDIP,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은 지금 용산기지 이전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지금 뭐가 의문점이냐 하면 군사시설비가 주한미군의 후생복지시설에 사용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후생복지라는 것이 전투력 증강, 사기 이런 것과도 연관되었기 때문에 꼭 후생복지에 투입되는 것이 나쁘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범관 위원 그러면 후생복지시설도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군사시설은 아니지만 전투력 증강, 연합방위능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더 나을 것 없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고 이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도 국익을 따지고, 따질 것은 따져서 실질적인 이득이 있도록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이범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참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외교부의 외교활동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았던 점을 위로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 이 정부 들어서 6개월이 지난 이 상황에서 평가를 해 본다면, 적어도 외교통일안보와 관련된 정책의 수행 성과를 놓고 볼 때 과연 이룩해 놓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느냐? 저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진솔하게 평가를 해서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 이 정부의 외교정책을 성과 면에서 평점을 한다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최선을 다해

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 미쳤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 남북관계는 완전히 대화 단절이 되어 가지고 아무리 대북정책을 쏟아 낸다 할지라도 상대인 북한에서 호응을 전혀 안 해 버리고 무응답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정책 아닙니까? 지금 대북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외교부나 통일부는 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불행한 것은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오지 않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박주선 위원 물론 그런데,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백년하세월 이런 상태로만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햇볕정책, 사실 성과가 얼마나 많이 안 있었습니까? 평화와 번영정책, 성과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이 두 번이나 있었고 UN이 지지를 결의하고, 그런데 이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하나도 활용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오히려 부정하는 이 정부의 외교정책에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주선 위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대북 정책의 기조와 노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물론 제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대북·북핵 정책이 과연 옳았던가 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쪽의 입장을 단정해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현재 비핵 개방 3000, 이 정책을 가지고 아무런 소득과 성과도 없는데 대북정책을 이대로 추진해 갈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대북정책은 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 2006년 8월에, 또 10월에 대포동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것을 과연 우리의 대북정책의 성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장기적인·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단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대포동 미사일을 한 번 쏘고 핵문제가 불거졌다고 그래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10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평가를 할 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새 정부의……

○박주선 위원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대북정책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로 초당적이고 전 정부나 이 정부를 떠나 가지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새 정부도 상생 공영 정책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우리 장관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독도 문제는 영토주권의 문제로서 단호히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주선 위원 그런데 9월 4일날 우리 장관께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지향코자 노력했으나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추진이 여의치 않았다', 독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외교적 성과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주선 위원 전적으로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 계획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 5일날 일본에서는 확정된 2008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했는데 예년과 똑같이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 및 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독도가 우리 건데 한국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가지고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일본이 자꾸만 계속해서 이렇게 도발적인 행위를 하는데 단호한 대처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버블 쇼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본의 그러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지난번 방위백서는 저희가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해서 엄중히 항의를 하고 또 문서를 통해서도 일본의 여사한 조치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박주선 위원 그런 정도의 수준이 단호한 조치의 내용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단호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단호한 조치라는 건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세를 바로 잡고 또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는……

○박주선 위원 글쎄,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야 되고 현실적인 외교적 수단과 방안이 그렇게 쉽진 않게 되겠지만 매년 개미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말을 말로써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내에서 태스크 포스라도 만들고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래서 총리 주관하에 독도영토관리대책단도 조직이 되어 있고 저희 외교부에서도 TF를 운영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적어도 한미 FTA 2007년 6월 30일자 서명본에 보게 되면 거기에 제1장 최초 규정 및 정의, 제2조 일반적 정의에 FTA 적용되는 지역과 관련해서 영역의 개념이 나오는데 영역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인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거나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규정에 의하게 되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나 해상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독도 문제에 대해 미국 지명위원회에서 독도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언데지그네이티드 서버런티(Undesignated Sovereignty)라고 했는데, 그때 한미 FTA 협정 내용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했지 않았느냐 이 논리를 갖고 내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협정을 해 놓고 이걸 빨리 비준하자고 부시 대통령은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도 빨리 비준해야 한다 하는데 이런 미국이 인정하는 협정, 이거 비준이 되게 되면 국내법입니다. 미국이 인정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활용 안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도 좋은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전에 미국이 시정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 미지정지역이라고만 해 놨을 뿐이지 대한민국 주권지역이라고 인정은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협정문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지역이다, 선언을 해라' 하고 압박을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예,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재외공관이 IMF 때 많이 줄어들었다가 지난해에 보충이 많이 됐다고 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리고 우리와 국력이나 국가 규모가 유사한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서 예산도 좀 많이 늘려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주신 자료에 있는 겁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외교인력이 한 3500명가량 더 많습니다. 재외공관은 한 100개가량 더 많고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의 2분의 1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는 대외원조, 또 UN분담금 이런 것이 외국에 비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제분담금 같은 것이 이태리가 결코 우리보다 적지 않고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문서로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와서 새로 대사에 임명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2회에 걸쳐서 외교부 자체로 한 4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선영 위원 사십오 분 정도가 새로 대사직에 임명이 됐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로테이션, 교체……

○박선영 위원 그러면 이번 정부 들어서 자원외교를 기치로 내걸고 있으니까 다들 자원외교의 전문가이거나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로 임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공관장보다도 우선 실무 요원 한 60명을 자원외교 공관에다가 재배치를 시켰습니다. 많은 공관에서 차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들만 자원외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고 대사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대사도 물론 자원외교의 고려는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인사를 한 건 아니라는 건 맞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 인사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대사직에 임명하는 인사의 원칙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국내에서의 보직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의 보직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대통령의 특보였거나 대통령 시장 시절의 자문위원이었거나 아니면 한나라당에서 주요 보직을 하셨던 분들이 대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원외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전통적으로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르겠지만 저희는 대개 전체 외교부 공관장 150명 중에 한 20% 정도는 소위 정치임명이라고 할까, 폴리티컬 어포인트먼트(political appointment)라고 그러지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유를……

○박선영 위원 글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개인의 인품이나 인격을 문제 삼을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마는 권철현 일본 대사라든지 문영한 쿠웨이트 대사, 또 김재수 LA 총영사 같은 경우에는 BBK사건 대책 일을 맡았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김정기 주상하이 총영사 같은 경우도 한나라당의 정조부위원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우상 호주 대사 같은 경우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특보를 하거나 상임자문위원을 했던 분입니다.

게다가 자원협력대사로 임명한 신재현 씨는 자원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사의 20% 정도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민정특보 출신이고 자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자원협력대사로 임명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국제협력단하고 재외동포재단하고 대표자를 임명하고 선발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것은 그때의 인력수요를 봐서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한국국제협력단 총재는 공모를 했지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공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단체의 임명절차와 결과, 응모자 등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외교부에서는 유광석 전 싱가포르 대사를 천거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교육자를 공모절차도

없이 이렇게 임명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시간관계상 답변은 문서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외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외공관을 확충을 했지만 이번 정권 들어서도 자원외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관 확충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그 자료에 보면 자메이카, 유네스코, 마이애미, 앵커리지 이런 데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곳이 자원외교를 하는데 충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자원외교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고려에서 주재국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입으로는 자원외교를 외치면서 어떻게 대사도 정치적인 고려만 하고 그리고 확충할 공관의 대상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에너지자원관 공모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내부공모였습니까, 외부공모였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에너지자원관은 주로 관계 부처에서 공모를 해서 공무원 내에서……

○박선영 위원 공무원 내에서 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제가 알기로 응모자가 적어서 연장해 가면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2대 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 그 자원외교를 외치는 이 정권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에너지자원관을 각 부처에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공모하면서까지 해도 2 대 1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외교통상부가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박선영 위원 그렇다면 그 자리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이 이렇게 많고 전문가들이 놀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 내에서만, 인식도 없고 의식도 없는 공무원 사회에서만 에너지자원관을 공모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부터 좀 깨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위원장님 해명 한 가지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현 대사는, 대외직명대사라는 시스템이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고, 대사의 활동이라는 것도 민간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무원 대사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을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아무리 민간인이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진 직함이 자원협력입니다. 그러면 자원협력을 할 수 있는 인사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분은 한전에서 오래 이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요새 원자력 수출 관계, 발전소 관계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진 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식 위원 한나라당의 이춘식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없이 정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중요한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춘식 위원 더구나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새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마는 또 북한 문제, 우리가 지난 정부 10년 동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할 때는 이제 북한이 좀 개혁·개방을 하고 북한 핵이 좀 불능화되고 북한 주민의 생활이 향상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 점에 대해서

는 뭐 평가가 좀 서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식량난을 겪고 있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춘식 위원 그렇다면 과거 10년간 대북한 식량지원 등 이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검토를 연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중국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중국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특별히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춘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북한하고 중국이 아주 돈독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개혁·개방을 해서 올림픽도 치르고 또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중국이 '사회·정치·경제·문화적으로 개혁·개방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북한에 권유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북한에 중국의 개혁·개방의 실적을 보여 주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춘식 위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외교력을 더 강화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도록 설득 내지 권유를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노력을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춘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해외동포 문제 중에서 특히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한 고려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강제로 사막에 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공산정권에 있다가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CIS 각국에 소속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우리가 아는 것하고 틀리게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6, 70여 년 동안 소련에 있다가 이제 다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국적이 본인들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 독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국민소득이 한 7, 800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동포는 17만 정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가면 전시효과적으로 회장을 만나고 나이 든 분들만 만나고 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생활터전에 관한 문제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 농업국가에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농업만이 직업이 아니고 직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생각이 특히 조국이, 한국이 경제력도 있고 또 국민소득도 2만 불인데 자기네들을 조금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아주 깊게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학교 졸업이 90%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 다인종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한국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대한 의식이 아주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산다기보다도 현지에서 자리를 잡고 조금 제대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직 거기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직업교육, 기술교육을 한 6개월 내지 1년 코스로 또 자기네 비용은 한국에서 좀 부담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미용, 그쪽에는 아직 미용이 없으니까 미용을 기술을 주면 거기서 가게를 차리면 돈을 벌 수 있다. 또 요리, 패션, 컴퓨터 이런 각종 직업기술 또는 기술을 배워 가지고, 선진된 모국에서 배워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점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하고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 이미 방문취업제라든가 고용허가제 같은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이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두 분 더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오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홍정욱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신낙균 위원님 하시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욱 위원 서울 노원병 출신 홍정욱입니다.

FTA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상임위 비준 먼저 하고 그뒤에 미국 상황 봐가면서 하시겠다, 윤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선 비준해서 압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선 비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봐가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희 기본입장은 본회의에서까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마는 국내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 또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달리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 외교통상위원회에서라도 하고 미국하고 압력을 가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힘들게 지난주까지 쇠고기 국정조사 마치셨는데 쇠고기가 FTA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통상사안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마는 일본이나 대만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아직 완강히 버티고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정권교체 전에는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는 물 건너간 상황이 되었고, 결국 우리가 쇠고기 수입 열어 주면서 이제 FTA에서 좀더 유리한 조건을, 지위를 회복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인식인데 그렇다면 이제 FTA라는 실익을 취해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 미국 측 상황 많이 안 좋은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장관님께서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홍정욱 위원 지금 농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30개월령 통제하는 QSA 이것 없애자는 그런 안들도 이익단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부시 행정부 얘기 자꾸 하시는데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에 민주당이나 미국 이익단체들과는 어떤 접촉과 설득 노력을 해 왔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재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인터레스 그룹들을 접촉을 하고 FTA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미국의 공업 관계, 제조업 관계 분들하고 개별접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리고 이제 레임덕 세션에서 통과를 시킨다 그러시는데 1935년 이후에 레임덕 세션이 열린 것이 열여섯 번입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홍정욱 위원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레임덕 세션이 열린 것이 여덟 번에 불과하지요. 이번에 레임덕 세션이 열릴 것이라고 왜 확신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부시 대통령이 우선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또 말씀을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다음에 예상, 특히 콜롬비아하고 미국의 FTA는 정치적으로 아마 부시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레임덕 세션에서 물론 중대한 GATT 법안이라든지 뭐 베트남 통상 이런 부분이 처리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레임덕 세션이 열린다고 치고 지금 콜롬비아, 파나마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홍정욱 위원 이 3주 안에 이 3개가, 우리 차례까지 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기술적인 것을 현재 주미대사가 미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상정시키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홍정욱 위원 그 협의라는 것에 지금 통과 순서를 바꾸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같이 하는 방법, 바꾸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면 지금 통과 순서를 바꾼다는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정욱 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작년 12월 8일날 김종훈 본부장님께서 슈워브 대표하고 면담을 하시면서 미측 일정대로 쇠고기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미 FTA 비준을 미·파나마 FTA보다 먼저 추진할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김종훈 본부장님도 쇠고기 문제 해결을 전제로 여타 국 FTA보다 우리 FTA 비

준을 먼저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하셨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홍정욱 위원 공개적으로 하신 건데 왜 이 자리에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구체적인 전략 문제입니다.

○홍정욱 위원 아직 가능성이 있고 노력하고 계신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홍정욱 위원 미국에서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경우에, 당장 지금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된다고 했을 경우의 문제점 또 오바마가 당선됐을 경우의 문제점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상황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홍정욱 위원 아주 숙제가 많으십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FTA 비준, 우리 국내에서 선 비준을 자꾸 요청하실 게 아니고 정말 미국 의회도 설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왜 선 비준이 필요하고 선 비준을 함으로써 어떤 구체적 실익이 오는가를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 비준을 얘기하는 건 그것이 단순히 경제·통상 문제뿐만 아니고 한미동맹 관계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는 것은 미측에 압력을 가하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쪽의 국익에 다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했다는 논리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 할 노력을 다하고, 할 것 다했는데 이 비준이 안 될 경우 그 역풍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정말 제2의 촛불이 타오르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리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얘기한 걸 보면 대미 무역수지는 한 4억 6000만 달러 정도로 추측하셨지요, 실제 향후 10년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홍정욱 위원 향후 10년간 한 4억 6000만 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본다, 이 안에 쇠고기·스크린쿼터 이렇게 4대 선결조건 해결한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구체적인 건 제가, 숫자에 대해서는 통상교섭본부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포함되어 있는지…… 아,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마저 하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역흑자가 향후 10년간 약 4억 6000만 달러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쇠고기 수입 관련한 그 규모가 향후 10년간 10억 달러 정도 되지요. 단순 계산만 해도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5, 6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고개를 끄떡임)

○홍정욱 위원 물론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 호주산 쇠고기 수입하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세계 무역수지는 달라지겠지만 국민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FTA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를 전제하는 단순 모형에 따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한 건데요. 그것을 갖고 어떤 특정한 상품에 투영을 해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쇠고기만 해도 제일 많이 팔렸을 때가 한 8억 5000만 불이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정상화 돼서 계속 그 정도가 들어온다면 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그 모델을 돌려 가지고 했던 것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쌀은 제외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관세가 내려가는 속도에 대해서도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제를 놓고 했던 모형이기 때문에……

○홍정욱 위원 본부장님 말을 제가 가로채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명쾌한 답을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논리를 깨끗하게 마련하셔서 꼭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홍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홍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신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균 위원 신낙균입니다.

마지막 순서이고 점심시간을 앞에 두고 계셔서, 일단 긴장을 좀 푸시고요. 그동안 답변하기에 무거운 자리였을 건데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핵 관련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 중단 및 핵시설 복구작업 개시 검토 선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북한의 행동과 관련해서 북한이 핵시설 복구작업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를 두고 한국과 미국 당국자 간에 발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왔습니다.

초기에 한국은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로 규정을 한 듯 발표가 됐었고 미국은 복구 시도가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후에 그런 해명을 아마 장관이 직접 하신 걸로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은 한미 간의 찰떡 공조라고 하면서 서로 말도 못 맞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런 보도 접하신 기억 있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신낙균 위원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인식의 차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입수한 정보의 차이 때문에 그런 혼란을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전혀 정보의 착오도 없고 인식의 착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표문을 가지고 전날 밤에 담당 국장급에서 협의를 했고 또 그다음날 아침에 김숙 본부장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문장을 서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데 왜 해명을 하셨습니까? 북한 핵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혼란이 와서 해명을 장관이 직접 하시는 입장이 됐는데 아무 차이도 없었다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그것이 아무런 착오도 없고 사실에 있어서, 정보에 있어서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낙균 위원 하여튼 그 해명 때문에 저도 안도를 했습니다만, 초기 발표는 저 자신이 매우 충격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다음 문제는 그러면 이번 사태가 북미 간 협상에서 검증의정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거진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러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샘플링, 사이트 비지트(site visit)라고 했는데 거기서 샘플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또 의심이 가는 시설을 가볼 수 있느냐 하는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북한은 못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검증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2단계 조치를 합의한, 10·3합의서에 이런 검증 2단계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검증은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금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사이트 비지트라고 이렇게 영어를 썼습니다, 합의를 해준 게. 그런데 현장에 가보는 것이 무슨 사이트시잉(sightseeing)도 아니고, 사이트 비지트라는 건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우리 측은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신낙균 위원 그러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비공식적인 합의 같은 것이, 그것에 대해서 없었다는 얘기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것은 없었고요.

○신낙균 위원 그렇다면 합의 내용의 해석을 두고 미국과 북한 간에 이견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렇다면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모호성이 외교에 있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때에는 모호성이

어려운 문제, 진전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렇다면 보고하신 내용에서도 그렇고 지나치게 한쪽의 얘기로, 한쪽의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해석하고 대응하고 계신 건 아닌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북한 측의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양측에서 이 문제가 잘 원만히 합의가 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입장을 세운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한쪽의 입장이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샘플링 허가를 해야 되겠다는 점에서 우리는 입장을 수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낙균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 당사국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미국 측의 입장에 더 동조를 하시고…… 합리성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북한 측과 향후 대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할 그러한 계획은, 필요성은 안 느끼시는 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 측하고도 접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북핵 해결의 그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6자회담에서 한국이 주변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자초했다는 해석을, 평가를 저는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반성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남경필 위원님 말씀이셨나요, ‘Anything but 노 대통령’이 아니라 ‘something from 노 대통령’. 저는 이런 것이 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실용외교의 내용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로 독도 문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월 29일자 인터네셔널 해럴드 트리뷴에 독도 관련 기사가 실린 것 알고 계시나요? ‘독도가 일본에게는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 사례일 뿐이지만 한국인은 독도를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소개한 것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이 보도에 대해서, 이 표현에 공감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신낙균 위원 이렇게 한국인에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마무리해 주시지요.

○신낙균 위원 한국인은 독도를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영토 이상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하여튼 1분에 마무리하기에는 좀 기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를 제가 짚어…… 독도 문제는 서면으로 하고요. 하나 그냥 단순한 얘기, 아까 이회창 위원님 질의에 에너지외교, 자원외교가 같은 말이라고 하셨는데 외교부가 같은 내용으로 보시는 겁니까? 말도, 내용도 같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자원외교에 에너지도 포함된다는데요. 요새 에너지 이슈가 하도 부각되니까 저희들은 에너지·자원외교 이렇게 좀 중복돼서 쓰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아니요, 우리 같이 원자재 문제,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자원과 에너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분명히 하셔야지요, 특히 외교관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러면 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원외교, 에너지외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신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찬 안내는 이미 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오후 2시 반에 속개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의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부산 중·동구의 정의화 위원입니다.

제가 2년 만에 통일외교 상임위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생각할 때는, 우리 외교통상부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재경 위원장을 하면서 바깥에서 본 우리 외교통상부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도 좀 많이 가졌고 실망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가능성도 많고 품격 높은 나라를 만들기보다는 졸부국가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많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해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구촌으로 대비되는, 표현되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외교력을 강화해야 되겠고 외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통상부 가족들의 각별한 노력과 그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하나하나를 지적하기보다는, 제 느낌으로는 우선 그렇습니다. 앞으로 2년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지적을 해 가겠습니다만 환골탈태적인 그런 의식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여러 희망사항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선행될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MB정권의 첫해의 외교정책 추진 목표가 튼튼한 안보, 경제 살리기,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정도라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초라하고 그리고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장보고 대사와 같은 그런 진취적인 분도 계셨고 안용복 장군 같은 아주 애국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신을 가진 분들도 우리 선조들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물려받는 그런 외교통상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교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교 지평을 넓히려는 의욕이나 그런 열정이 좀 적어 보인다, 제가 오늘 이것을 우선 먼저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첫 4년 동안에 외교통상부가 선정한 방안을 저는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수교국 188개국 중에서 80개국에는 외교 인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최소한 1인 공관 정도를 만들어서라도 저는 전 수교국에 우리 외교 인력을 배치하고 공관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표는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아프리카에 대해서 자원 외교뿐만 아니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좀더 우선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외교 인력 증원 목표도 연 200명에서 250명으로 늘려 잡아야 되겠고 인원을, 공무원 전체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처를 새 시대에 맞게끔 정원을 재조정하면서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외교부의 인력을 확충해 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제언을 해 봅니다.

또 ODA 등 해외 협력 비용도, 저는 이번에 반기문 총장이 오셔서 역설하는 것을 봐서는 노무현 정권에서 정해 놓은 2015년의 0.25%라는 목표를 2012년 정도로 당겨서 달성해 달라는 의지가 그 뜻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비용도 줄이고 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 이 점을 우리 외교통상부가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에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북한의 지원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농업에 있어서 우리 비료의 지원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옥수수를 주로 하는 식량지원은 물론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겠지만 아울러서 식목과 그리고 농업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올해 작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으로 참으로 작은, 어쩌면 어리석다는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장관께서 작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진정으로 필요할 때 도와야 그 감사함을 알게 되고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더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WFP가 지원요청한 것이 15만t, 옥수수로 따져서 한 15만t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으면 오히려 한 20만t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이번에 전 세계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동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명박 정부도 얘기하지만 상생과 공영이라는 그런 대북정책을 말은 하면서 과연 거기에 뒷받침되어 주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말뿐만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상생하고 공영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외교통상부가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인색한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통일부에 비해서 외교통상부의 위상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의 장관께서 또 여러 고위직에 계신 여러분들부터 그러한 생각을, 인식을 바꿔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경우에도 제가 17대에서 누누이 고구려사, 고대사 문제와 일본과의 독도, 근세사 문제를 합쳐서 하나로 재단을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별개로 두어서 그 각각이 제대로 발전하게 하고 상호 경쟁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독도에 대한 여러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번 새 정부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을 과거와 같이 돌리는 것도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독도에 해병대를 보내자는 둥 이런 아주 기발하고 어쩌면 아주 위험한 아이디어부터 여러 제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독도는 우리에게는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생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을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을 파견해 가지고 독도의 여러 가지 생태적인 문제나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존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연구 분석을 하게 해서 바로 우리 땅, 우리 앞마당인, 우리 정원인 우리 땅 독도를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끝으로……

제가 3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용복의 날을 제정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위원장 박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정의화 위원 안용복의 날 제정이나 또 안용복 선생에 대한, 장군에 대한 재조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부산에서 울릉도, 독도 또 일본을 들러서 오는 우리 젊은이들을, 1년에 한두 번씩 그 배를 가지고 루트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만드는 것도 연구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첫 상임위이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정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위원 우리 장관님하고 여러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히 질의할 텐데요,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를 선포한 협약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은 96년 6월경에 새로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서 독도가 일본 200해리 기점이라고 공식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1년 후 97년에 울릉도가 기점이라고 발표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현재 독도에 관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분쟁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일본이 96년 6월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날 저녁이든지 그 다음날 새벽 4시라도 우리도 독도가 기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연구들을 하시느라고 1년 후에 울릉도가 기점이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에 관해서 좀 알아보니까 서면질의를 두 번 했는데 대답을 안 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인지, 우리 정부는 왜 1년 후에 그렇게 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지

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첫째로 당시에 국제해양법의 일반적인 추세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는……

○정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96년 6월경에 발표한 건 사실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몽준 위원 또 우리 정부가 97년에 한 게 사실이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정몽준 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가 1년 후에 그런 것 했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상식에 맞춰서?

일본이 그렇게 하면 이게 또 일본의 내부 방침이라면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발표를 했다면 그날 오후 늦게라도 우리가 하든지 그 다음날 정도는 해 주셔야지 어떻게 1년 후에 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 외교부에 있던 책임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여쭤보신 게 시기적인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독도를 기점으로 안 했다는……

○정몽준 위원 독도도 안 했을 뿐 아니라 그것도 1년 후에 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일본이 독도로 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1년 후에 가서 겨우 울릉도로 했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선 알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몽준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외교부 책임자가 누구셨나요, 96년~97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몽준 위원 아니,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96년이면 12년~13년 전인데.

누구신가요, 그 당시는?

유종하 장관이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그때는 아마 한승주 전 장관이……

○정몽준 위원 한승주 장관이 초기에 하셔서 제가 알기로 93, 94……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맞습니다. 한승주 장관이 93년에 하셨고 그다음에……

○정몽준 위원 한 장관 후임은 누구셨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승주 장관님 후임이 홍순영……

○정몽준 위원 공노명 장관이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공노명 장관, 예.

○정몽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우리 유 장관께서는 전임자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하기는 그럴지 몰라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그다음 질의 하겠어요.

신한일어업협정이라는 것이 98년 1월에, 우리나라로 치면 97년 12월 대통령선거 그다음에 IMF 사태로 우리가 일본에게 20억 불 30억 불 소프트론 해 달라고 그럴 때인데 이 분들이 표현하자면 98년 1월에 전격적으로 파기를 선언하고 1년 동안 협상해서 99년 1월에 됐는데, 저는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정부가 항상 하는 대답은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고기를 더 많이 잡는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정말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우리가 고기도 더 많이 잡고 유리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한일어업협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겠다고 할 경우에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자 그러면 정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유리하고 일본이 불리하게 된 협정이라고 한다면 왜 행정부에서는 이 이야기 나오면 그것을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고려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제가 보면 직무유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대답이 항상 그렇잖아요, '일본 쪽에 가서도 고기 잡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잡으니까 잘 됐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하자고 그럴 경우에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것은 어업에 관한, 물론 이것이 어업의……

○정몽준 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저도 최소한의 관심을 갖고 보는데 우리 외교부 책임자들은 아직도 동문서답하고 책임감이 전혀 없이

사실하고 다른 대답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 외교 책임자들이 이렇게 자꾸 직무유기적인 태도를 취해도 되는지 제가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어업협정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제주도 남쪽 대륙붕이 있는데 그 대륙붕의 80%를 그 협정에 따라서 일본에 넘겨 줬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대륙붕의 개념은 대륙붕은 육지의 연장이다 그래서 그럴 경우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거리 개념으로 했다는 이런 주장이지요.

일본의 오키하고 우리의 제주도 중간에 그어서 했기 때문에 대륙붕의 80%가 그리로 갔다 그러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유 장관께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어업협정은 어업질서에 관한 것, 대륙붕협정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것은 또 별개고. 이게 전부 다 별개의 목적으로 별개의 협정이기 때문에……

○정몽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업협정이 별개라 그러는 건 일본 쪽의 주장인데……

○위원장 박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정몽준 위원 일본 쪽의 주장은 센가쿠나 북방 4도에서 전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지요.

가령 북방 4도의 경우에 우리는 북방 4도를 현재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러어업협정에 있어서 그쪽에 가서 조업을 하러 갔더니 일본 쪽에서 이것 우리 영토인데 왜 들어왔냐고 우리의 어선을 나포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해 개념하고 어업이 별도라는 주장을, 일본 쪽의 주장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하고 있는지 전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센가쿠도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우리 외교부가 조용한 외교라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조용한 외교는 오래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에 의해서 조용한 외교를 포기한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독도에다가 접안시설을 했더니 일본이 자기네 땅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당시 정부의 공식발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정간섭이라는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군참모총장한테 지시를 하셔서 공군전투기가 거기를 초계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책임자들은 조용한 외교 운운하는데 국가의 최고책임자가 하시는 것하고 외교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이것이 상대편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 속는 건지 참 걱정이 되는데 여태까지도 우리 외교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우리 장관께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한 거지 직무유기라고 하시는 건 조금 지나치신 것 같고요.

○정몽준 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무유기는, 96년에 일본이 독도를 갖다가 EEZ 기점으로 한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1년 후에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하나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여간에 제가 공개회의 석상에서 지적을 하는데 유명환 장관과 우리 외교부 책임자들은 여기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 좀 해 보시고, 다음에 또 의견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시간이 경과해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정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문학진 위원입니다.

인사가 만사지요? 모든 일은 사람이 하지요. 인사문제 가지고 우리 장관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적절치 않은 인사, 온당치 못한 인사, 비상식적인 인사를 연달아 인사를 해서 많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인사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 청와대와 지금 이명박 정부가 애써서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의 공관장 인사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는 정권교체가 돼도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중요한 인사, 독립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외교부가 지금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다섯 달 동안 행해진 외교부 관련 인사에 15명 이상의 보은 인사 또는 세칭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쇠고기 사태 등 국정운영 책임을 물어서 지난 6월에 경질됐던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OECD 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또 물가상승, 고환율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만수무강 장관'이라는 별칭을 듣고 있는 강만수 장관 대신에 대리경질됐던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제1차관을 아시아 주요국가의 공관장으로 지금 내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 아닙니까? 성난 민심을 달래고 국정파탄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경질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상당기간 자숙해야 하는 기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현직 대학총장 신분으로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을 해 가지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구양근 전 성신여대총장, 아시아권 주요국 공관장으로 지금 내정을 했습니다.

또 평소 극우적 사고방식과 발언으로 인권단체 또는 대북단체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제성호 중앙대 교수인가요, 이 사람을 인권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인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권영건 전 안동대총장인가요, 이 분도 선진국민연대라는 단체의 상임위원장 하면서 대통령선거 때 열심히 뛴 분이지요. 그래서 그 보상인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인사를 가리켜서 코드인사를 넘어서 캠프인사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있지요,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교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법에 명시가 돼 있지요? 그런데 한국국적 없는 이웅길이라는 사람을 애틀란타 총영사 임명하고 김재수라는 사람을 LA 총영사 임명하고 이랬다가 말썽이 나니까 이웅길이라는 사람은 자진사퇴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우리 권종락 차관님 지금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문학진 위원 이웅길 씨에 대해서 한국국적 없는 것 아니냐 지적이 있으니까 우리 권 차관께서 '그 사람이 교민사회하고 본국 정부를 제대로 링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때 사설에서 우리 권 차관 발언에 대해서 차관 말 들으면 그러면 도쿄총영사는 재일교포가 해야 되고 상하이 총영사는 우리 재중교포가 해야 되고 그러란 말이냐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재수 LA 총영사요, 이때 말썽이 빚어지니까 외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임명 당시에만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합법이니까 당장 미국시민이라 그래도 현재의 불법은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이상한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장관님께 묻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런 공관장 인사 등에 대해서 비판 또 지적이 막 끓으니까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인사를 했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 또 청와대에서는. '비서관은 입이 없다, 그래서 입을 닫았다'.

그런데 이 인사, 누가 한 겁니까? 우리 장관께서 하셨나요, 누가 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인사권자는 공관장, 특명전권대사는 대통령이 또 총영사의 경우는 외교부장관이 임명권자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인사조직 속에서 협의해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학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썽이 있었고 비판이 많이 일었고 물의를 빚었던 이런 공관장들 임명하고 내정하고 할 때 장관께서 청와대에다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런 의견을 밝히신 적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문제에서는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선뿐만 아니고 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일단 마칩니다.

○위원장 박진 문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달 미국에 갔다가 헌책방 들려 가지고요, 우연히 지도 두 개 샀어요. 지도책 굉장히 두껍고 가져오는데도 굉장히 무거웠는데요. 필요하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하나는 60년대 초에 영국서 나온 지도인데요, 독도를 다케시마, 일본 영토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또 한 권은 90년대 초에 캐나다에서 나온 지도인데 이것은 아주 독도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권을 우연히 제가 샀는데, 전 세계 지도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 회사들이니까 어디는 독도로 표시되어 있고 어디는 다케시마로 표시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외교부에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도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죽 조회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이것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독도라고 표시된 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본 영토로 아예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은 강력히 항의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좋은 지적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제가 가서 책을 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고맙습니다. 한번 보여 주세요.

○진영 위원 예,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다음에 처음 업무보고하는 건데 정부 입장을 좀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째가 한미 FTA, 우리가 한미 FTA 하기 위해서 많은 양보를 했잖아요. 체결을 위해서 우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참 고생 많이 하시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입장이 어떤 건지……

아까 안상수 위원이 질의할 때는 상임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할 때는 미국을 좀 보자 하니까 아주 좋은 생각인 것처럼 말씀하셨고 바로 윤상현 위원이 질의할 때 윤상현 위원은 그냥 우리가 빨리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두 분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미국 것을 좀 보면서 하자는 거고 또 윤상현 위원은 미국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하자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할 것인지, 지금 정부 입장이 뭔지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오늘 업무보고한 것 보면 우리 정부도 미국 것 보는 것 같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본심은 빨리 국회에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지만 또 정치적인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진영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미국 상황을 국민한테 알리고…… 괜히 우리가 먼저 했다가 미국이 안 되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국민한테 알리고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도 미국 하는 것을 봐서, 미국이 안 하는데 우리가 뭐 급하게 할 것 있냐 이런 입장이면 그런 입장대로 국민한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교부 입장도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느낀 것은 미국 진행상황을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졌는데, 말하기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 것 볼 것 없이 먼저 해서 미국을 좀 압박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지로 정부 입장이 뭔지 명확하게 국민한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업무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다음에 6자회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자회담은 부시대통령이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4자회담이 있었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이 한 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진 위원장, 황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진영 위원 이 4자회담도 결국은 6자회담이 생기면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6자회담의 운명은 지금 미국에 새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반드시 검토를 할 거라고요. 6자회담을 그냥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오바마 후보가 된다 그러면 양자대화를 하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양자대화를 했지만 어떻든 간에 6자회담 내에서 하겠다는 거였고 오바마 후보 생각은 지금 직접 대화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 대화를 막 시작하면 6자회담은 자연히 또 뒤로 밀려나게 되고 그래서 미국도 검토를

할 거라고요, 6자회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지금까지의 6자회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으니까 우리는 과연 6자회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달리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국민 앞에 밝혀야 돼요.

그래서 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6자회담이나 비핵화 문제,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은 계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인도적 지원 자꾸 하라고 얘기 나오는데 연계시키는 것도 아니고 안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으면 자꾸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6자회담을 죽 보면 애매한 규정도 많고 막 있잖아요. 9·19 합의서부터 2·13 합의서, 작년 10·4 합의서까지 보면 애매한 규정이 좀 있었는데 특히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 대상에 기존핵이 포함돼 있다고 그때는 다 얘기했다고요, 천영우 대표가 얘기했다고요. 결국은 기존핵 다 빠졌잖아요.

불능화도 처음에는 5년 정도 불능화하다가 1년으로 줄었고, 지금 검증 문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당연히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니까 검증은 당연히 있다고 그러다가 합의하고 검증을 시작하면 테러지원국 해제한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합의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애매한 부분에서 북미 간 대화건 간에 6자회담에서의 결론이 북한에 밀리는……

그래서 애매한 규정을 그때 어쩔 수 없이 됐다면 그 애매한 규정을 플러스되게 나가지 않고 자꾸 북한의 입장에 밀려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그런 게 있으니까 죽 한번 검토를 해서 새 정부의 입장을 밝히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진영 위원 여기서 업무보고 때 하셔야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새 정부의 입장은 6자회담이 북한 핵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유용한 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오바마가 됐을 경우 과연 6자회담을 그러면 중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오바마 진영 측에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현재 직접적인 미북 간 대화를 하더라도 6자회담은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외교팀에서 그런 문제까지 세부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후보가 누가 될지, 되고 나서 그 후의 정책이 어떤지를 봐서 우리가 결정할 건지 아니면 6자회담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할 건지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 새 정부의 입장은 6자회담에 대해서 이미 입장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용한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입장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6자회담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남북관계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좋으신 지적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진영 위원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를 하든지 어떻게 마음속으로 후원을 하든지 하지, 정부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

○진영 위원 지적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유명환 장관님, 중책을 맡으셔서 아주 책임을 많이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일상의 외교 관리자로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외교안보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라의 외교안보정책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데,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이 분야는 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외교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관련 각료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셔야 될 것으

로 생각이 되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외교 역량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수준에 따르지 못하는 만큼 재임 중에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큰 업적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외교안보 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부분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에서는 새로 정부가 바뀌면 외교안보정책을 검토하고, 소위 리뷰 세션(review sessio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검토 기간을 충분히 좀 가져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그런 충분한 기간을 갖지 않고 급격한 정책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무리한 일도 있었고 또 외교장관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진영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한반도의 장래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이게 우리 문제인데 여기에 어떤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어떤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북핵 2단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전에도 북한 핵문제는 워낙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 애매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남겨 놓고, 그러한 간격을 두고 합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누가 메웠느냐? 한국이 미국과 공조를 잘하고 또 북한하고 소통을 하고 또 그 위에서 한중 조율이라는 틀을 이용해서 메워 왔습니다.

즉,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구도를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해 왔는데 제가 관찰하기에는 새 정부에 들어와서 소위 이런 한미 공조, 남북 소통, 한중 조율이라는 3박자 구도가 붕괴되었다, 완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붕괴가 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붕괴의 배경에는 우리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고 또 복잡한 국내 정치를 배경으로 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혀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을 하는 데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중 조율도 제대로 기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핵심에는 뭐니 뭐니 해도 남북 소통이 실종된 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한 정권이 좋아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건 아니지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도를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미래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유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외교부 간부들이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취지에서 작년에 10·4 남북정상합의 제4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과 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 그렇게 먼저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다음에 제5조에서 남북 간 경협을 한다 이렇게 경협의 사항을 늘어놨습니다.

바로 이 정신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인데 또 그러한 정신 때문에 북한 핵문제가 굽이굽이 막혔을 때도 제가 지금 말한 그러한 3박자 구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현재와 같이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해 나가면 한국 외교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게를 갖지 못하는 일종의 무중력 외교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특히 조금 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미국의 대선에 있어서 매케인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상당한 긴장 구조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가 되고 또 오바마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소위 통미봉남 같은 형국이 조성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외교장관께서 지금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남북정책을 포함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전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머리를 좀 맞대고 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좀 심각하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의 갈 길이 뭔지, 전의 정부에서 했던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정책이 아니지요. 자기의 구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정책이지요. 그렇지요? 무고하게 반대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

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좀 솔직하게 머리를 맞대고 재검토를 해 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명환 장관께 저는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을 들어 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송민순 장관께서 외교부장관 재직 시의 여러 가지 경험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한 가지 외교부 역량 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특히 외교부 인력 확충을 위해서 200여 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확충해 주시고 노력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대북 정책,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첨예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가급적이면 좀 장기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무엇이 장기적인 국익에 합치되는가 하는 면에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 내에서 많은 검토와 토의가 있었고, 아까 말씀했는데 10·4 선언에 관한 것도 새 정부가 입장을 밝혔고 또 새 정부도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해서 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경외시하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고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간의 공생의 길을 나가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단기적으로 한쪽에서만 보시는 것보다는 긴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게 아닌가, 특히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의 공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송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정옥임입니다.

요새 미국 조야에 가 보면 미국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는 반미를 외치고 또 자주외교를 주장하면서 수사는 참으로 거창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이 원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해 줬고 또 주한 미군기지 이전 문제도 해결해 줬고 또 이라크 파병도 해 줬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더 편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심리적인 동맹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는데 미국이 볼 때 한국이 원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무기 구입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치를 격상시켜 줬다든지 또 한국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WEST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쇠고기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추가협상을 통해서 한국이 얻어 가진 것은 참 많은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뭘 얻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걸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 관계의 돈독한 스킨십이라든지 또는 정서적 신뢰를 강화하면서 우리가 비용·효과적으로 대미 외교를 잘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뢰라든지 인식은 대미 외교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이라든지 앞으로 자원 외교에서 합리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비용·효과라는 점을 감안해서 외교를 잘하시리라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북한이 불능화를 포기하고 다시 원상 복귀하는 관점에서 미국이라든지 한국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라는 첩보 수준의 이야기도 떠돌고 또 북한이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할 때 과연 그렇게 해서 설득한 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에 긴급 대응정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또 한미 간에 어느 정도의 조율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늘 이렇게 북한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것이 북한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학습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뿐만이 아니라 5개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런 식의 벼랑 끝 전술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반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외교적인 복안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중국의 역할을 좀더 기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역할

에만 오로지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5자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도 직접 북한이 2단계에서의 검증 합의를 안 하고 약속한 대로 신고를 게을리 했을 경우에 이것은 제재가 다시 부활된다는 아주 강한 입장을 표시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의 방향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못 하도록 하는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다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으로 FTA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FTA 비준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선 정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면밀히 주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미국의 대선에서 매케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바마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요번에 의회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시 점유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레임덕 세션이 열리면 일괄해서 해결하겠다라는 희망적 관측을 갖고 있지만 매케인이 되느냐 아니면 오바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과연 레임덕 세션이 열릴 것인가 아니면 열리지 않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 또 희망컨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어서 레임덕 세션이 열려서 일괄적으로 부시 행정부하고 타협을 보는 시나리오가 우리에게는 가장 긍정적이지만 매케인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 레임덕 세션이 열릴 경우, 그리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레임덕 세션이 열리지 않을 경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대비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답변 끝나신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국회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 FTA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21세기 선진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FTA는 한나라당 정부가 체결한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가 체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당적으로 이것을 비준해야 될 역사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신지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사실은 우리가 FTA를 작년 4월 2일날 체결해 놓고 비준에 있어서 좀 실기한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모든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오바마가 당선이 됐을 경우 오히려 아이러니컬한 것이지만 레임덕 세션에서 오히려 FTA를 통과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다만 매케인이 됐을 경우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미 민주당 의회에서 오히려 더 이 문제에서 강한 입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비록 오바마 대표가 FTA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역대 미국 정부가 체결한 FTA가 부결된 예도 적고 또 특히 한국과 같은 큰 시장규모하고 미국이 FTA를 한 것도 드문 일입니다, NAFTA를 빼놓고는.

그래서 이것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민주당 위원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우팅(voting)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FTA 비준은 미국 국내정치의 민감한 영향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鄭玉任 委員 제가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1분 미리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FTA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지적했듯이 FTA는 미국의 대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원외교가 중요한 과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黃震夏 마무리해 주세요.

○鄭玉任 委員 국회와 정부 간에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 간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전략적 동맹이 지난 정부의 미래지향적 동맹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과, 또 한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동맹과 한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에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외교부가 분명한 입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공여하는 WEST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차세대의 전 세계의 지한파 그리고 친한파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 요구하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외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지원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정옥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서갑 출신의 구상찬 위원입니다.

외교통상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존경하는 이회창 위원님, 지금 안 계시지만 현황에 새 정부의 외교철학과 외교기조의 방향이 없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진영 위원께서 가장 중요한 FTA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고,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외교통상부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잘 준비를 하셨는데요, 특히 19페이지에 보면 대중국 관계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만 혐한 문제가 기본방향에 또 이 평가에 빠져 있습니다.

혐한 문제, 특히 중국 내에 불고 있는 반한감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중국 국민이 보여 준 반한감정은 우리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중국의 일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조차도 '실생활에서도 반한감정이 느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진출해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도 여기서 정리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면 이것이 한국 기업과 또 한국 브랜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지금 중국의 혐한 문제가 현존하고 있는,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외교부 직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시각이 아니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의 시각이라는 것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에서 그냥 '양국 국민 간 부정적 정서' 이런 단어 하나로 넘어가시는데 좀 심도 깊은 시각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관한, 중국의 네티즌들이 2억 5000만 명이 있거든요. 지금 엄청난 수의 중국의 네티즌들이 반한감정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외교부에서 이것조차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전에, 지적을 하고 넘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낙균 위원께서도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9월 3일 북한이 핵 불능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외교통상부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날 바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동된 장비들이 핵시설 재건이나 재조립에 사용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우리 존경하는 신낙균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장관께서 오전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한국과 미국은 일부 장비를 창고에서 꺼냈다는 현상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언론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들은 외교부장관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외교력과 또 외교부의 역량을 가늠한다는 것을 장관께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외교부를 홍보하는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서 언론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불능화 중단 선언시점을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를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차기 미국 대선후보인 매케인 후보와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북핵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매케인이나 오바마 모두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북한의 핵기술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같이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정상적인 북·미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공통점 말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하나씩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표적인 차이점이라 그럴까요?

(황진하 간사, 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차이점이 본질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다만 조금 모양에 있어서 오바마가 북한하고도 대화를 하겠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보는 미국 조야의 시각은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혐한감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대책회의를 고위급에서도 했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만 여기 오늘 보고에도, 뵙고 제가 그것을 크게 이야기 안 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대외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민감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린 것 아니고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상찬 위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이 오바마 문제, 매케인 문제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우리 외교통상부가 이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과 노력이 없이는 미국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한 한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독도 문제는 아까 김충환 위원님, 신낙균 위원님 또 그외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진영 위원님도 지명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의 데이터베이스인 지오넷에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서울은 케이조(Keijo), 한강은 간고(Kan-ko), 청계천은 세이케이센(Seikei-sen)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장관께서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구상찬 위원 이것은 언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국립지리원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직접 관계기관을 통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너무 축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독도 문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처를, 마무리 대처를 아주 잘하셨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잘 추적해서 국민들의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다시 지적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8월 4일, 5일 한국 미국 일본에서 해군 연합합동훈련하신 것 아시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구상찬 위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이 장관께서는 조금 생소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 독도 문제나 또 일본의 방위백서 문제가 아주 민감할 때인데 하와이 서쪽 120마일 지점에서 합동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

○구상찬 위원 국방부하고 외교부는 말이지요……

○위원장 박진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조금만……

국방부와 외교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군사·외교적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인정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맞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래서 국방부와 이런 것은 사전

에 협의하셔서, 더군다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는데 같이 합동훈련한 일본의 제3호위군이라는 해군은 바로 독도 지역 인근을 수비하는 일본 해군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독도를 놓고 군사적 충돌이 생길지도 모르는 이런 상대방 국가와 함께 민감한 시기에 합동훈련을 했다는 것은 외무부와 국방부의 사전조율이 없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크게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장관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답변 따로 없으십니까? 답변 끝난 건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냥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한나라당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한나라당 황진하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외교통상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제 18대 국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과 함께, 아까 오찬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외교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외교통상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남북대화가 잘 진전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유를 우리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이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그렇다,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진실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지난 정부 때 했었던 외교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지난번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사항을 그대로 잘 같이…… 뭐랄까 그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 그것은 말이 많지 않은데 조금만 다르게 나가는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또 목소리가 거센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북한 핵 문제를 풀면서 보게 되면 조금만 북한하고 미국의 대화가 진전이 되면 통미봉남, 통미봉남 그러면서 한국은 또 왕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사항 중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해야 될 것은 잘 유지를 하는 것이지만 지난번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수행했던 것이든지 대외국정책을 수행했던 것이든지 이런 것 중에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았고 국민들 여론도 지지를 별로 안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입장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말씀하신 취지 잘 알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래서 지금 실용외교라는 말로 해서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교정책이 특징지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지난번 정부에서 했던 것이든지 우리가 하는 것이든지 또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지난번 정부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우리가 보완시켜 가지고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그걸 강조하면서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마치 지나친 강경정책을 썼다든지 통미봉남을 강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꾸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조금씩 위축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하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냐,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맞습니다.

○黃震夏 委員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동의합니다.

○黃震夏 委員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씩 몇 가지 제가 중요 이슈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입장 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불능화 작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또 원상복구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당히 진전이 안 되고 지금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진전이 안 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김숙 본부장께서 베이징을 다녀오셨지만 북한을 뺀 5자 당사국의 입장을 제가 보면 미국은 대선 치른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또 일본은 후쿠다 내각이 물러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홀가분한 상태라고 그럴까,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나라별로 지금 북한 핵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그

럴까, 지금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원상복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베이징에 가서 느끼셨던 사항을 미국은 어떻고 이렇게 한 가지씩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김숙 본부장……

○黃震夏 委員 김숙 본부장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숙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간단하게 각국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검증의정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검증의정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확보한 채, 그러나 이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학성을 확보할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북한이 원하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이 왠지 이런 협상에 나오지는 않고 공개적인 성명만을 발표하는 데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지난 8월 동안 올림픽에 신경을 쓰느라고 다소 6자회담에 신경을 못 쓰는 듯한 그런 인상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가서 확인한 결과 이번 상황이 그렇게 과잉 반응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위기로 발전할지 모른다, 따라서 신속하게 5자가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제일 관심 사안이 일·북한 관계의 납치자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만나기 전날 북한 측에서 납치자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를 일본 국내 정국 때문에 연기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무슨 방안을 내는 것보다는 한·미·일 공조, 그리고 중국 측의 입장을 많이 청취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아까 송민순 위원님께서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그리고 의장국인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단계 불능화 작업을 조속히 완료시키고 3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黃震夏 委員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6자회담 당사국에서 북한 빼고 나머지 다섯 나라가, 여러 나라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이 하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공조를 취한다라고 우리는 강조를 하지만 이런 사항을 잘 보면서 대처해 나가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문학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회의 모두에 정부 쪽에서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좀 신속하고 또 충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진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에 의거해서 재적위원 3분의 1 규정을 이용해서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적위원 3분의 1 규정을 이용해서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외통위 29명 중에 달랑 7명밖에 없는데 3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면 야당은 자료 요청도 하지 말라는 뜻인 건지…… 박진 위원장님, 이 발언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진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서류나 또 문서를 요구합니다. 아마 각 의원실에서 전부 요구하셨을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실에서 직접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후에 서류 제출 거부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효한 자료 요구를 위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 제출을 정부

에 요구할 때 우리 위원회 29명 중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진 아닙니다. 물론 대개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 안 되는 경우에 3분의 1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반드시 자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17대 국회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학진 위원 그러면 3분의 1 동의를 얻지 않고 개별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정부에서 자료 제출을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위원장 박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협조를 최대한도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주당과 선진당 또 비교섭 이렇게 해서 구속력 있는 자료 요구를 가능케 하는 경우 또 정부는 민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구속력 있는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상천 위원 그 자료 요구는 상임위에서 결의를 해 줍니다. 위원 각자가 자료 요구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면 상임위에서 1명밖에 없는 무소속 위원도 잘못된 자료 요구가 아니면, 아주 특단으로 잘못된 자료 요구가 아니면 결의를 해서 하는 거고 3분의 1 서명을 받아서 자료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외교통상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낸 자료 요구가 법에 위반된다든지 혹은 아주 문제가 많은 그 경우 외에는 위원회 전체 결의로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서명 받고 어쩌구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나가면 무소속이나 소수당은 자료 요구를 하나도 못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건 국회의 관행이 아니에요.

○위원장 박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 관한 법 조항에 보면, 물론 우리 위원회 의결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제출요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3분의 1로도 그러한 강제적인 자료 요구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국감계획서 의결 시까지, 그런 자료 요구를 의결하기 전까지 그런 방식으로 요구하시라고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각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무슨 제한 같은 건 당연히 없는 거지요?

○위원장 박진 당연합니다.

○문학진 위원 그리고 각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지금 박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특단의 문제가 없는 한 정부는 의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 박진 그렇습니다. 지금 국감계획서 의결이 17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다 구속력 있는 자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권해 드린 것이고, 개별 의원실이 지금까지 해 오시던 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대한 협조해서 자료 제출을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것도 혹시 정부가 제대로 안 낼 경우에 대비해서 먼저 각 의원실에서 요구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추인결의를 여기서 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박진 그것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위원회 의결로 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송민순 위원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위원장 박진 송민순 위원님.

○송민순 위원 지금 박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느냐 하면 3분의 1 그 규정을 말씀하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저쪽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 이거 3분의 1로 의결하지 않은 자료 요구는 적절히 내가 판단해서 내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 외교통일위원회가 국회에서 언론 용어지만 '상원'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다 굉장히 초당적으로 논의를 하고, 국사를 논의하는 이러

한 회의의 장인데 왕왕 이렇게 보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행정부에서 자료가 어느 정도, 뭐 원하는 대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대 수준 비슷하게 와서 거기에 기초해서 원만하게 토론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오지 않음으로 해서 회의 모두부터 감정적으로 이렇게 토론이 되는, 진행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료를 가지고 건설적인 토론보다는 시비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료는 여든 야든 관계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한 위에서 건설적이고 초당적인 외교통일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자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법률 조항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자료 요구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으시면……

진영 위원.

○진영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진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진영 위원 예.

○위원장 박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신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진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나라당의 김충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김충환 위원입니다.

대북식량 지원 문제는 차관으로 주던 것을 무상원조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충환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인도적 지원은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지원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기아 상태에 처했을 경우 우리가 인도적인 측면에서 다른 것과 연계하지 않고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오늘 아침에 보고한 걸 보면 인력과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그런데 그런 것을 결정하는데 장관께서 대통령과 같이 의논하면 바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정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김충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는 외무부가 제일 아주 선임기관이다, 그래서 외, 내…… 죽 외우는 게 있고 그랬는데, 미국에 국무장관이 있듯이.

앞으로는 정부부처 내에서의 외무부의 역할을 좀 강화하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김충환 위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키르기즈스탄이라고 거기 임병일 씨가 그 나라에 투자, 무역대표부 설립을 위해서 들어오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됐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분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됐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키르기즈스탄에서 아주 굉장히 정치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곧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서 이왕 그분이 그 먼 데 가서 살고 또 애를 쓰고 있는데 모국에 좋은 일을 하러 왔다가 망신을 당하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관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북핵시설 원상복구 조치가 시작됐다' 이게 한국 측 발표고 미국에서는 '장비이동은 확인됐으나 핵시설 제거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 뉘앙스, 즉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유는 없습니다. 이

유는 없고 이미 그런 복구 조치를 한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한국 측 발표가 정확하다 이 말씀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쇠고기 협상에 FTA와는 별개다 이런 입장을 외무부가 그동안 죽 취해 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충환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별개지만 미국이 FTA에 쇠고기 문제를 연계시켰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것이 쇠고기 문제하고 FTA가 연계가 사실상 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그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쇠고기 문제라는 것은 우리들이 볼 때는 위생검역에 관한 문제고 FTA라는 것은 주로 관세 철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둘은 원래는 완전히 별개 성격의 문제인데……

○김충환 위원 글쎄,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국내에서 볼 때 미국의 농업 부서 또는 농업과 관련되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등등이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요. 우리에게 보복을 한 것이지요.

○김충환 위원 그것을 외무부에서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지난번에 막 의문을 제기했을 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미국에서 이것을 바꾼 것에 대해서, 표기를 바꾼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명위원회가 갑자기 바꾼 것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미 측이 해명해 온 바에 의하면 기술적인 그런 착오다 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한 것입니다.

○김충환 위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할 때 독도가 빠지게 된 뒷배경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일본인 부인을 데리고 사는 담당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시볼드라는 사람입니다.

○김충환 위원 거기다 일본에서 계속 이렇게 로비를 해 가지고 그게 빠졌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정확한지 여부는,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일본의 로비가 굉장히 적극적인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일본 측에 유리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로비력을, 로비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뒤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압력을 넣는 것에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우리도 그런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한 번 밀렸고 또 이번에 미국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밀려 가지고 잘못하면 로비 때문에 영토를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실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로비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세 분이 물었는데도 전부 검토해 보겠다, 답변이 항상 검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수하면 당장 굶어죽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추수한 쌀이 북한의 각 가정에 들어가는 때는 11월 달이랍니다. 그러면 그때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외국인들이 북한 동포를 돕겠다고 해서 식량을 지원하는데 같은 민족인 우리가…… 북한이 여러 가지로 좀 괘씸하게 행동하지요. 오히려 큰소리치고,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같은 민족인 우리 대한민국은 빠지고 다른 외국 나라들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이 현상은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장관께서 답변할 때 말

씀하시드만,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한다 이것이 일관된 원칙인데 지금 인도적 지원인 쌀 문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북한이 금강산 사건 일으키고 핵 문제 검증을 중단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것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유보하고 있는 이 사태는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 하는 우리의 일관된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관된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면, 북한이 아무리 괘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인도적 지원은 우리는 조건 없이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니까 이 원칙대로 우리는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세운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신뢰가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남북한 간에 지금 경색된 국면을 타개하는데 호재로 작용할 소지가 농후합니다. 지금 그것 말고 쌀, 식량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무슨 특사를 보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또 나라의 위신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는 당장 굶어죽지 않으면 좀 놔둬도 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소, 11월 달까지의 곤궁한 시기, 아사가 생기기 쉬운 시기,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한국이 자기 동포에 대해서, 같은 민족에 대해서 하는 행위가 과연 어떻게 비칠 것인가 이 문제, 일관된 원칙을 우리가 준수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세운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지키는구나 하는 인식을 줘 가지고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증진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질의라고 하겠는데……

우선 그렇게 할 생각 있어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WFP를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남북한 간에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주고 싶은 것이 우리 통일부의 지속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도 저희가 바라는 것은 좀 남북한 간에 식량지원에 관한 만남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디다가 뭐 휴전선 근처에다가 던져 놓고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지난번 5만t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래도 최소한도 실무자 간에 남북한 접촉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통일부하고 북한이 계속적으로, 남북한 간에 직접 안 받아가겠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지금 말씀하신 WFP……

○박상천 위원 시간이 가니까 말씀드립니다. 직접지원인가 간접지원인가 따지지 마시고 외국 사람들이 식량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도 보내세요, 나라가 망할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면.

그러면 원칙을 세우지 말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북한의 태도와 결부시켜서 행한다고 이렇게 원칙을 세우든가, 저는 그렇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대답하셔 봤자 똑같은 소리나 하시겠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하나 추가로 말하겠는데, 지금 중국에서 반한 감정, 혐한론 있는데 점심시간에 제가 어느 신문을 봤더니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동포 회장이, 한인회 회장이 기자들하고 이렇게 대담한 것 죽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째서 과거에는 아주 남경학살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왜 갑자기 올림픽에서 일본선수단 들어올 때는 박수치고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은 무슨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 본대로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주중 일본대사관에서, CCTV입니까? 무슨 TV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중국 국영방송입니다.

○박상천 위원 중국 국영방송을 평소에 잘 어울려 가지고 아주 친숙하게 돼 가지고, 쓰촨 대지진 때 일본 구조대가 중국사람 시신을 모두 수습해 가지고 국기를 덮어 가지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답니다. 그것을 본 중국 국민들이, 13억 국민들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양반 말이 한국은 그보다 더 훨씬 위험한, 일본 구조대가 한 것보다 훨씬 위험한 화학공장에서 구조를 했는데 뭐 특별히 보도도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대사관서 그것 모른 척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중 대사관에 특별 예산을 좀 내려 보내세요. 내려 보내서 혐한론을 빨리 불식시켜야지 이것 이대로 두면 나중에 그 몇 배의 큰 불이익이 우리한테 올지 모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예.

○위원장 박진 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윤상현 위원입니다.

아까 김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대북 식량지원을 아예 무상지원하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해 놓고 차관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차관으로 주는 경우가 2012년이면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화끈하게 무상지원으로, 인도적 지원할 바에야 화끈하게 무상지원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보다는 아마 북한의 입장이라든가 또 이것이 모니터링의 조건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유상지원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성격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복잡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상현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께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하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 인도적인 문제는 우리 정부 입장이 북한의 동족이 기아 상태에 처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 해서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기아 상태에 임박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식량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우리가 잠시 눈을 돌려서 지난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대북 퍼주기를 했습니까? 공식적인 것만 4조 5000억인가 그렇다는데, 그렇게 해서 북한의 변화가 유도가 됐습니까? 북한이 정말 핵개발을 포기했습니까? 정말 우리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왔습니까? 북한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쌀 몇 만t 준다고 해 가지고 북한이 변화하는 나라냐? 그런 체제가 결국 아니라는 것……

그래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제가 아까 오전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농작물 상황에 대한 확실한 올바른 평가가 선행이 돼야 되고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분배의 투명성이 없이 북한 군인들한테 전용되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돕고 싶지요. 그런데 북한 당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체제를 전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체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같은 동족이라고 해도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

○윤상현 위원 그래서 신중을 기해 달라, 국민적 합의하에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숙 평화교섭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빼고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까 여러 나라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중국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그래도 여러 나라 중에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고 특히 8월 25일날 한국하고 중국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후진타오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고위급 전략대화를 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고위급 전략대화라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해 나갈 작정입니까?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숙 그것은 6자회담 수석대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 관계되시는 분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6월 26일날 결국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에다 60페이지에 달하는 북한 핵신고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북한 핵신고서를 보면 과거 핵무기라든가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시리아에 대한 핵확산이 다 빠졌습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보면 모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동결 폐기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2·13 합의부터 완전히 과거핵은 문제를 안 삼고 오히려 다른 문제 '불능화'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불능화라는 개념도 제가 보니까 크리스토퍼 힐이 처음에는 콘크리트를 완전히 원자로에 넣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작년도 9월에 심양 가서는 몇 년, 다년간 못 쓰게 하는 게 불능화 개념이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불능화를 1, 2년 정도 못 쓰게 하는 거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미국의 입장이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과거 핵무기 문제입니다.

북한이 8개나 되는 과거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거핵이 계속해서 상존한다면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오히려 과거핵을 포함해서 북한의 모든 핵문제가 풀릴 때까지 전작권 이양 시기를 연기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북한 핵문제하고 전작권 이양 시기하고는 직접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작권 이양 문제는 한미 정부 간 합의에 의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전제조건이 전작권 이양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연합전력은 절대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제일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나빠져서 만약에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한다,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1991년도 미국이 만든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의해서 91년, 92년도 1단계로 주한미군 7000명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93년, 94년도에 한미연합사를 해체를 하고 전작권을 이양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1차 핵위기가 터져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북미 간에 또 한국하고 북한 간에 여러 가지 핵무기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우리는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이 문제를 전작권 이양 시기를 지연시켜야 된다는, 그렇게 좀 논의해 보자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미 FTA 비준, 오바마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거 캠페인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 박진 우리 윤상현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윤상현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바마가 지금 자꾸 한미 FTA가 결함 있는 결정이다, 협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에는 자동차노조와 자동차업계를 고려한 다분히 선거 캠페인용의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한 그런 방법, 그래서 과거에 클린턴도 NAFTA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가 집권한 다음에 다시 NAFTA를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고 또 부시 대통령도 예전에 선거 캠페인할 때는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자라고 했다가 당선이 된 다음에는 전략적인 파트너다, 이런 식으로 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다분히 캠페인성이 짙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 올렸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진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대북 식량문제는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부 답변이 하도 답답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북 5000만t을 제공하겠다고 정부에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북한에서 안 받은 것 아

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정부가 그렇게 미적미적하고 소신이 없습니까?

안 받아서 못 주는 거지요.

꼭 지금 분위기가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인도적 지원하겠다는데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인도적으로 대북 지원 안 하느냐, 그러면 자꾸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준다고 그러는데 안 받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죄송합니다. 그래도 북한에 기아상태가 일어나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준다는데 갖고 가야지 그러면 어디 입에 갖다 넣어 달라는 얘기에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논쟁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정부가 인도적 지원 안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자꾸 비치잖아요!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무국적 고려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외동포가 한 700만 명에 달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공해서 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일제 압박과 항일 투쟁에 나서서 조국을 떠났던 구소련 지역, 러시아를 비롯한 CIS 지역, 여기에 50만 고려인 동포가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 소련 붕괴 이후에 민족 차별 종교 차별과 같은 수많은 박해와 차별을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무국적 고려인이 한 2만 명 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 구소련 지역의 50만 동포 중에 10%에 해당하는 5만 명이 무국적자다, 난민보다도 못한 삶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모 방송에서 고려인 강제 이주 70년 기획보도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 실태 보고-우리는 유령처럼 살고 있다'는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에 집과 땅까지 있는 사람이 내전을 피해서 우크라이나 왔다가 무국적자가 돼 가지고 한달에 3만 원도 못 버는 노숙을 하고 있고 스스로 인터뷰에서 나는 들쥐 인생이오, 미래가 없는 절망스런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했음에도 무국적으로 대학 지원도 못 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또 자기 어머니 건강이 악화됐는데도 무국적자가 돼 가지고 어머니를 보살피러 가지 못한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고려인 문제는 다른 우방국의 재외동포들과 달라서 냉전시대 우리 조국의 불행한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와 수교한 지 18년이 지났고 우리 국가 위상도 크게 성장한 현실에서 이에 대해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큐멘터리 프로에 대해서 보도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우리 정부 간에 협력해서 무국적 고려인이 다 국적을 취득하도록 도와주고 있고 지원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범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적 취득을 위해서 본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인당 평균 2000불에서 7000불의 비용이 드는데 사회적 약자인 무국적 고려인들은 그 돈이 2, 3년간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돈이 없어서 어떻게 국적을 회복하겠습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무국적 고려인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을 약속했지마는 정작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다큐멘터리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어떤 사람은 조사에 응하다가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 사업 실적이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형식적으로 했다는 서류보고로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의지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적 취득 사업, 정부에서도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국적자한테는 이것을 어떻게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무국적자 국적 취득을 시키거나 농업 정착을 시키는 것 많이 들어가는 건 아는데 비용·재정 문제 이 예산이라는 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KOICA의 ODA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거기에 인도적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고려인 무국적자들이 우리 정부 지원 자금을 많은 비용 중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을 해서 또는 현지 정부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무국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망국의 한을 안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유령과 같은 삶이라든가 들쥐의 삶, 미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지탄스러운 일이고 우리 동포들이 조국의 발전된 모습을 널리 알리고 조국이 또 동포를 잊지 않고 있다는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우리 조국과의 가교 역할을 자부심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FTA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언제 이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실 예정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당정협의를 통해서 날짜를 곧 결정하겠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중에 가급적 조속히……

○이범관 위원 정기국회 말에 제출하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언제쯤 제출하실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로선 아직 당정간에 최종 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범관 위원 FTA 비준동의가 신속히 이루어져서 미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으니까 빨리 제출해서 충분한 논쟁을 거쳐서 합의를 이뤄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TA와 관련해서 제가 농촌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큰 피해가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 분야는 어떻게 피해를 보전해 주느냐, 물론 외교통상부의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그 아이디어의 하나로 해외 농업 진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아실 겁니다. 해외에 농업 진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농민들이 가서 농사를 할 수 있고 무언가 손해보는 사람을 보완해야 될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외교부의 직접 문제는 아니지만 외교부가 이런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관계부처간에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이미 33조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또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참고로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선 무국적 2세들에 대한 고등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 정부가 좀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KOICA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동포재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범관 위원 예, 잘 되고 있네요.

○위원장 박진 이범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통상교섭본부장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 가지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인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당연하겠지마는 지금 비준을 할 때 형식적인, 무슨 문구 검토를 하고 조문 검토를 못 해서 비준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FTA 체결로 인한 각 산업 분야 그다음에 피해 계층, 농민을 포함한 여러 국민 여기에 대한 보완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FTA에 대한 비준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사실상 국민적인 공감대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FTA의 비준 문제를 국회에서 다룰 때에는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각 분야를 망라한 소관 상임위를 대표한 분들이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비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18대 국회의 총체적인 어떤 결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마는 그간에 있었던 경위를 본다면 17대 국회에서 이미 상당한 부분 세심하게 상임위 별로 1차 검토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FTA 내용을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FTA 비준을 하기 전에 각 국내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 보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외통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그 부분도 주로 농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대책이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지금 특위 만들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지금 농업 분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교섭본부장이 잘 모르잖아요? 설령 되었다 할지라도 국민적인 동의를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의견을.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제가 소상히는 몰라도 대체로 그 줄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소상한 보완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내법……

○박주선 위원 아니, 특위 구성의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는 것이지 왜 그렇게 질의내용보다 답변이 길어 버립니까? '예' 아니면 '노' 하면 될 텐데……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죄송합니다.

특위 구성에 좀 중복적인 게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주선 위원 아까 오전 중에 질의를 했었는데 FTA 비준 서명 안에 우리 영역의 개념이 지금 정의가 돼 있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박주선 위원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다 하는 것을 선언해 달라고 요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조문입니까, 아닙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만 제 일차적인 판단은 이 FTA에서 영역에 관한 정의조항은 FTA가 적용되는 범위에 관해서 만들어 놓은 문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나 대한민국의 영역이 어디까지다'고 하는 그 법률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조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FTA를 체결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을 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게 되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을 안 하고 이랬을 때는 분명히 미국의 입장을 정리를 시키고 비준을 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입장이 정리가 된 다음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든 말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런데 한미 간에 한국의 영역에 대해서 FTA 조항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영역이 여기까지라고 정할 수 있는 것은 FTA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런데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효과가 있어야 활용이 되는 것이지……

○박주선 위원 우리 외교부장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그것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효과가 없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왜냐하면 FTA에 미국이 그렇게 포함을 시키면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 영토 주권을 인정한 거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영토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먼저 우리가 선제 주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문제하고 독도 문제는 미국에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일본에서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박주선 위원 어째서 전혀 별개의 사안이에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은 또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시간 벌어 가지고 하기로 하고요.

주일대사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겠는데 우리가 신한일어업협정이 98년도엔가 체결이 되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주선 위원 그런데 그 어업협정에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에서 영토 분쟁으로 하고 있다 하는 학자의 견해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업에 한해서 제정된다고 본문 제15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래서 신어업협정을 폐기를 할 입장까지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어업협정은 영토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하는 규정이 분명히 어업협정 내용에 들어있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런데 그 주장을 한국이 먼저 한 거예요, 일본이 먼저 한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아마 논리적으로 보면 물론 상호합의에 했겠지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은 우리 영토인데 우리 영토를 가지고 어업 문제하고 영토 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만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본이 영토 문제와 어업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을 해 가지고 협정이 조문화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다음에 독도영유권에 대해서 분쟁화를 시도하고 자기 영토라는 억지주장이겠지만 억지주장을 하려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볼 수도 있지마는 역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수역에 넣어 가지고 일본의 어선들에 대해서 해상 추적권도 없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어업 문제기 때문에 영토주권을 주장한다면 당연히 추적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업 문제는 어업 문제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아져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당신네들도 간접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을 인정했지 않았느냐라고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먼저 주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논리가 좀 복잡해서 그러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대법원에서 판결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어업협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느낌을 줬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이미 났기 때문에 일단 개념 정립은 그것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주선 위원 아니, 우리가 포기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조문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좋은 논리기 때문에 그 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리고 중간수역보다는 잠정수역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것은 원래 어업 질서를 위한 잠정적인 조치기 때문에 잠정수역이라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는 역시 자원외교 문제를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외교라는 용어가 외교적으로 바람직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기 쉽게 소통을 위

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만 무슨 법률적이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쓴 건 아닙니다.

○박선영 위원 외교적인 언어는 굉장히 신중하고 영향력이나 파급효과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자원은 있지만 국력이 약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대상 국가들의 국력이 나중에 신장이 되고 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용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즘 중국에서 혐한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 자원외교라는 용어도 그렇게 적절한 외교 용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우리 자원외교가 중국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가, 지금 우리 GNP는 분명히 중국보다 높지요?

그런데 자원외교를 중국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중국은 적극적이다 못해서 공격적으로 보이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우디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가스전 개발권을 획득을 했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2008년도 올해에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하고 유전개발권 계약을 했다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방정부, 더구나 정정도 불안하고 치안도 그리 좋지 않은 지방정부하고 유전개발권 계약을 한다는 것이 이게 안전하고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민간기업에서 완전한 계약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MOU, 의향서 정도 체결한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 주의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제가 중국하고 비교하는 까닭이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간정부가 그냥 MOU 정도 한 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대정부 홍보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협력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2003년도에 이미 카자흐스탄에 군사원조, 기술원조 해서 한 300만 달러 이상을 무상원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중국 사이에 가스관을 직접 연결하는 공사도 하고 있고, 그런 데 비해서 우리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나라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저희들은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사절단을 정부가 조직해서 보내고 또 정부 간 협력방안을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사절단 보내고 하는 그 외형만 갖추고 있지 제가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웃풋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인가요, 원전 10개를 새로 짓겠다고 그랬는데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지금 학자들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50년에서 60년 쓰면 우라늄은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5, 60년 안에 우라늄 매장량이 다 거덜이 나는데 우리는 앞으로 20년 후에 10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한승수 총리가 가서 우라늄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해 놓고 왔다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이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짜고 외교통상을 하시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위원들이 오늘 대북지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더 다른 시각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기 국민이 굶어죽어 가는데도 원조를 안 받겠다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억지로 이렇게 줘야 하는지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겠다고 지금 중국에서 러시아까지 중앙아시아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전시 중의 그다음에 전후의 우리 국군포로들 실태는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한 납북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건 저희들 통계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박선영 위원 현재 납북자하고 국군포로 합해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납북자는 저희 통계로 하면 한 480명 정도 되고요. 국군포로도 아직 생존하고 있는 분들이 한 560여명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서술어를 생존하고 계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들 아마 수명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겁니다. 평균수명으로 봐도 그렇지만, 북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국군포로들이 살아 있을 수 있는 연한은 얼마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은 얼마나 어떻게 경주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현재 중국으로 탈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중 간에 조용히 여러 가지 협조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북한 내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수단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모든 것이 현실적인 제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정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난 정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더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일본은 메구미라고 하는 여성 한 사람, 그것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그 메구미가 남겨 놓은 딸 하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일본 외교가 얼마나 총동원이 되어서 노력을 했는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에서부터 정치인을 한 사람씩 데려올 때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앞으로 대북 관계에서 그런 분명한 원칙과 기조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조금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상호 의존도가 높아 가면 그러한 실질적인 남북 간의 협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위원 지금 우리 외교통상부 안에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아까 오전에 부서 소개하실 때 그런 부서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핵평화교섭본부장 산하의 과에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북핵…… 어디서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라는 조직이 있고 산하에 과가 하나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과에서요?

자,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총리실 밑에 이 납북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납북자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에서만 데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외교통상부에서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지도 않고 한 개 과에서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전담 부서를 좀더 격상시켜서 총력을 기울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거는 부처 간의, 남북 간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꼭 그것이 외교부의 업무인지에 대해서도 좀 협의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북 관계하고 남북 관계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건 중국 탈북자 또 동남아로 탈출한 사람들의 송환을 위해서 우리가 외교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좀더 소관 부처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선영 위원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봐서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박선영 위원 납북자라든지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외교부가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참고로 한 가지 답변할 것은 아까 자원외교, 에너지외교에 대해서 상대방이 좀 외교적인 용어에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 좋으신 지적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에너지 협력 외교, 자원 협력 외교, '협력'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쪽에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주고받는 외교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은 좋은 지적으로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자원외교라는 말이 주는 인상이 당신네 나라하고의 우호 증진에는 관심이 없고 당신네 나라가 가진 자원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다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홍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욱 위원 노원병 출신 홍정욱입니다.

장관님, 지난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금강산 피살사건 관련 문구가 삭제된 것을 두고 여러 분들께서 망신외교라는 지적하셨지요? 그 경과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조금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의장성명의 성격에 관해서도 조금 잘못 알려졌고, 그것은 어떤 관계국 간의, 참석자 간의 합의나 투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논의되었던 내용을 의장이 요약을 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금강산 사건에 대한 기본 목표로서는, ARF라는 게 신뢰 구축에 관한 얘기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북핵 문제에 관한 얘기를 했고 또 남북간 현재의 교류 문제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금강산 사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참가국들이 코멘트를 한 것이고, 저희들의 목표가 그것을 의장성명에 꼭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간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참석자들에게 이래서 남북대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홍정욱 위원 어찌됐든 다자회담 결과물인 의장성명이 폐회 다음날 바뀌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요.

○홍정욱 위원 그러면 싱가포르 가기 전에 금강산 피살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이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우리 부서에서 실무자뿐만 아니고 고위급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금강산 사건은 사건대로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타국에 부탁을 해서까지 이 문제를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내부적으로 정리했었습니다.

○홍정욱 위원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북한의 대응전략이 어떨 것으로 예상하고 갔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은 그걸 부인하고 코멘트를 안 할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

○홍정욱 위원 한국 정부 6·15, 10·4 정상선언 이행 이런 이슈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면서 치고 나올 것은 예측하셨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거야 뭐 100% 예측은 할 순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북한이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10·4선언의 우선적인 이행을 약속하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면 가실 때 남북관계에 대해서 논의만 하자 이런 목적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국제공조를 통해서 대북한 압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당시 입장으로서는 ARF라는 회의 성격상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홍정욱 위원 의장국이었던 싱가포르의 외무장관이 북한에게 북·아세안 우호협력조약을 제시했고 그것이 바로 이 회의 직전에 체결되어서 북한과 싱가포르 간에 우호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감지하고 가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럼요. 저도 그 조약 서명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런데 남북 동시 수교국인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더 밀착적인 외교를 했어야 됐다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외교에 싱가포르가 어디가 가깝고 멀다는 차원이 아니고 북한 측에서 금강산 넣은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우리도 또 10·4 선언만을, 남북대화가 그것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문제점을 사후에 지적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이걸 동시에 다 삭제를 한 것은 협의회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있는 기록, 토의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재량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홍정욱 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루어진 6·15선언, 10·4선언 이거 이후에, 그전으로 돌아가서 노태우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가서 남북기본합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우리 이명박 정부의 대책인데, 그렇다면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10·4남북정상선언에 기반을 둔 남북대화 발전 강력 지지'이 같은 구절이 아니라 지난번에 왜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선언문에서 잘 이루어 내셨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홍정욱 위원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 간의 모든 합의 내용에 기반을 둔 남북대화 발전 강력 지지'이 정도로만 포함됐어도 아주 외교적인 성과 아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남북 대결 시대에 그러한 문장을 하나 가지고 남북 간에 늘 밀고 빼고 하는 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외교적인 낭비는 안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문장에 뭐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또 싱가포르의 그런 민감성까지 우리가 설명해서, 설득해서 하는 것을 우리 외교 목표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문안을 넣고 빼고를 가지고 남·북한 간의 경쟁은 과거에 하던 일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홍정욱 위원 그런 인식을 장관님만 가지고 계시면 뭐 합니까? 온 국민이 망신외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인식을 좀더 잘 홍보하시든지, 이제 UN 등이나 기타 국제무대에서 북한이 똑같은 전략으로 나오면 그때도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놔두실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는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 가지고, 문안을 가지고 협상할 생각은 없습니다.

○홍정욱 위원 자,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소통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망신외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아마 그런 인식을 가지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정부가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확실히 아실 필요가 있고요. 만일 국민들께서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면 UN이나 기타 국제무대에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좋으신 지적 잘 알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홍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예, 정의화입니다.

오늘 종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의 겸 드린 말씀에 대한 우리 외교부와 장관님의 입장 좀 들어 보면 좋겠는데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

○정의화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우선 다시 드리지요.

지금 외교통상부에 특히 ODA 관계 말이지요, 전에 반 총장 오셔서 누누이 강조했는데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앞 정부에서 결정되었던, 2015년에 0.25%까지 가겠다는 것에서 좀 당기자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사실 그 때문에 관계부처 회의 또 재정전략회의, 뭐 여러 회의에서 외교부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과부적입니다. 워낙……

○정의화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조력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의화 위원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그 지역의 잘사는 사람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듯이 국가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졸부국가로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아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역으로써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이 지구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외교가 그런 점에서 노력을 좀 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인원증가 문제, 특히 다른 부처에 대한 재조정으로 인해서 생긴 그 인력을 우리 외교부에서 활용하는, 재교육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도 그 얘기를 사실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는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정부 부처 내에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합니다.

○정의화 위원 외교부가 너무 젠틀한 것 같아요. 너무 신사적이고 그리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현상에 너무 만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외교부를 믿고 정말 조국의 미래가 있겠느냐에 대한 실망을 제가 아까 조금 피력했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이면 좋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현상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정의화 위원 그런데 그 불만에 대한 노력이 제가 봐서는 너무 패시브해요. 좀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고맙습니다.

○정의화 위원 우리야 외통위에서, 우리 박진 위원장 이름도 박진이지 않습니까? 아주 박진감 있게 밀어 줄 것이니까요, 노력 하시기 바라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고맙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리고 아까 공관을 늘리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전 세계 수교국에 1인 공관으로도 보내고 거기에 대한민국 예산으로 대학졸업생들을 적은 급여라도 주어서 인턴으로 1년간이라도 어느 나라건 보내는 그런 좀더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과거와 똑같이만 돌아간다면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외교부장관의 정말 특단적인 그런 인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정의화 위원 그리고 올해 7월에 아프리카 콩고하고 카메룬하고 몇 곳에 공관을 그렇게 한 것을, 17대 때 누누이 강조된 것이 이제 조금씩 현상…… 97년 IMF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러나 너무나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아프리카에 대해서 말이지요. 중국과 일본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아프리카 통째로 일본과 중국이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이 아프리카를 우리의 우방으로 만들고 자원뿐만 아니고 저 어렵고 힘든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주어 볼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저는 지금쯤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접근해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봤던 아프리카인들은 아마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우리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정을 느끼고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 우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정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저는 다음번 질의를 위해서 사실 확인 겸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다.

김숙 본부장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4자회담인가요? 이번에 북경 다녀오셨죠?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숙 예.

○구상찬 위원 북한의 수석대표 김계관 대표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숙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구상찬 위원 없었습니까? 사실 확인을 할 게 있어서요.

혹시 4자회담 하시면서 북한의 특사 문제, 그러니까 우리 특사가 아니고 의장국인 중국에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사를 좀 보내 달라라든지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숙 우선 이번에 간 것은 4자회담이 아니고 6자회담 내에서 4개국이 협의를 할 수가 있었고요. 특사에 관해서는 4자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간 바 없습니다.

○구상찬 위원 없습니까?

내일 북한이 9·9절인데요, 혹시 중국에서 특사로 누가 가시는지 정보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외교통상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숙 보고 못 받았습니다.

○구상찬 위원 못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약간 그럴 리가 없는데라는 의문이 있

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박선영 위원 질의 중에 장관께서 납북자나 또 우리 국군포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교부에 그런 부서가 아까 한 과가 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구상찬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탈북자 문제 때문에요, 그것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국에서도 물론 하지만 우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산하의 한 과에서 그것을 다 취합을 하고……

○구상찬 위원 그것은 탈북자를 위한 것이지 국군포로나 그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국군포로가요, 지금 중국에 탈북을 해 가지고 여러 분이 계십니다. 과거에 또 계속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으로 모셔왔고 지금도 현안으로 있는 업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상찬 위원 아, 그러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구상찬 위원 용어 선택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군포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탈북자 문제도 중요하지요. 아까 박선영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본 정부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자기 국민을 위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국정감사 때 질의하려고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국군포로 문제는 지금 외교부에 전담과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구상찬 위원 그래서 전담과가 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고. 물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지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국군포로 문제가 잊혀가는,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 다시 우리가, 국가라는 게 뭡니까? 다시 어떡하든지, 찾아온다면 단어가 좀 우습지만 모시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정부도 이렇게 노력, 물론 노력하는 마음은 갖고 있겠지만 행동으로 바꾼 정부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것을 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외교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확인하는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총리실에서 갔든 청와대에서 갔든 반드시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옥수수 5만t, 전 정부에서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던 옥수수 5만t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통일부에서 북한 측에 공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는데 북한 측에서……

○구상찬 위원 그렇게 펜딩(Pending)돼 있는 상태지요, 지금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거부하고 있지만 통일부에서는 그냥 펜딩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이라든지 국군포로와 관련한 문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통일부 쪽 업무사항에 가까운데 아무래도 NSC 상임위 좌장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북핵 문제라든지 다른 정치적 사안과는 연계되지 않는 것이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기 약속된 5만t의 옥수수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이범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북한 당국이 거부했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식량지원 자체를 이명

박 정부가 거부한 적은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없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리고 지금 정부가 가급적이면 직접 협상을 해서 식량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북한의 취약계층에게 투명하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세계식량기구가 있지만 세계식량기구를 통할 때 간접비 계상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 10년 동안 1년에 수십만t씩, 그러니까 수백만t이 될 것 같은데 그만큼의 식량지원을 했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식량난이 개선된 흔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직접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지요,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한나라당 위원님, 특히 윤상현 위원께서 전작권 이양시기와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울고 싶은 미국 뺨을 때린 격이긴 하지만 이미 지난 정부에서 약속된 것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약속이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단 그 상황에 따라서, 특히 우리의 조기경계능력이라든지 또는 신속대항능력이라든지 또는 정찰이라든지 탐지능력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빌트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전작권 이양시기에 대해서 연기를 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동감입니다.

○鄭玉任 委員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증의정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북한이 또 벼랑 끝에서 자신들의 체면을 차리고 돌아오는 명분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 운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동시검증 내지는 검증단의 일원에서 한국인은 빼겠다 이런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앞으로 그런 가능성도 상정을 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대비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불능화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하겠다고 그러는데 한국 정부가 판단할 때 원상복구를 한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리라 예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시설에 따라서 6개월 내지 1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원상복구의 문제와는 별론으로 지금 플루토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플루토늄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대비가 지금 철저히 되고 있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뭐 저희 나름대로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하여서 다른 나라와 논의하신 바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미국하고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다음에 또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비자면제프로그램 연내에 실행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닿는 이슈이긴 한데요. 여기 보면 실·국별 업무현황 37페이지에 '중대범죄 여행자 식별정보 교환 협정 문안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협의해서 잘 해결돼서 연내에 실현될 수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소위 쌍무적 시큐리티 코퍼레이션 어그리먼트(Security Corporation Agreement)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무슨 현안이 있는 겁니까? 해결해야 될 어려운 현안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조금 한미 간에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대범죄에 대한 기록을 서로 교환

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 중대범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법의 시스템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법으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범죄기록 자체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범죄기록에 관한 한 자유스럽게 공유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제도의 차이점을 좀 조정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 조정은 연내까지 잘 실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연내에 이것을 발효시키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鄭玉任 委員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박주선 위원님께서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홍정욱 위원님께서 ARF 문제 관련해서 또 정의화 위원님께서도 너무 외교부가 젠틀한 나머지 좀 수동적인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안이 전문성을 요하는데다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다 보니까 사실 한나라당에서 지난번에 독도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실제로 외교부에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기 때문에 항상 일방 학자의 주장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소위 퍼블릭 디플로머시(Public Diplomacy)에 대해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선영 위원께서 향후 전 지구상에 쓸 수 있는 우라늄 매장량이 한 60년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5년에 OECD의 뉴클레어 에너지 에이전시(Nuclear Energy Agency) 자료인데 여기 보면 향후 220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원자력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사용 핵연료를 재활용, 평화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하게 되면 무궁무진한 원자력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원자력 외교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외무성 인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2014년에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다시 갱신하는 문제와도 연결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며 또 이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정옥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원자력이라는 것은 현재 알려진 재고량만 해도 200년이지만 또 쓴 걸 재처리해서 계속 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이 파이로 프로세스(Pyro process) 할 수 있는 기술도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비가 싼 것이 원자력의 이용입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2012년에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도,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 상업적인 측면에서 그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독자적인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미측에 제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정옥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하셨지요?

○黃震夏 委員 예.

○위원장 박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지금 한미 FTA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한데 상대국인 미국이 대통령 선거다, 또 아니면 정당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프로세스가 안 되고,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제대로 진척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나라하고 맺어지는 FTA 협상 이것과도 연결되고,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당·정 협조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토의를 할 걸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하나하나 질의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낸 건 답변 좀 우선 해 주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유명환 장관님과 외교부 간부들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질의보다는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해 놓고 앞으로 우리 정책을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론 과정에서 보면 북한에 대해서 몇 년 동안 4조 5000억을 퍼줬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2002년부터 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쌀을 한 40만t 정도 지원했을 겁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통일부 사항이지만 외교부장관께서 정책 전체를 총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걸 파악을 하시고, 모레 통일부 때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40만t 정도를 지원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한 80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8000억 중에서 실제 북한에 가는 가치는 한 1500억 안팎이고 한 6500억 정도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몫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제가 이걸 맞다 틀리다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끼리 논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또 여기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농촌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8000억 중에서 6500억 원은 바로 우리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갔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다음 외교통일위원회 때 하든지 아니면 통일부 할 때 논의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는 통계를 분명히 가지고 말씀을 차기에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그 위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책임 있는 미국이나 또는 우리 정부 당국이 근거를 가지고 어떤 핵 능력을 가졌는지,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과거 핵 여덟 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마 듣는 분들은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여덟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이걸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 이상으로 평가했을 때도 우리가 북한에게 불필요한 카드를 주는 것이 되고, 북한이 실제 핵 능력이 있는데도 그 이하로 평가했을 때는 우리 안보태세를 미흡하게 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해 주시고 국회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혀 주시는 게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야기를 다 못 하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군포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미시적 접근으로 국군포로만 딱 떼내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남북 관계와 주변 상황 이런 걸 죽 볼 때 국군포로에 대해서 우리가 거시적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국군포로라는 어젠다를 딱 내서 접근하는 게 실제로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다음번에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핵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에서의 핵 검증체계에 대해서 논의가 일부 되고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 9·19 공동성명 때 공동성명이 한반도에서의 검증체계 문제가 논의된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미국도 그렇게 동의를 하게 되었는지를 잘 밝혀 보고, 이 문제는 정부가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다른 나라하고 협상할 때 자신 있게 대해 주는 게, 협상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했을 때 유명환 장관님께서 외교·안보 정책은 시간을 두고 차분히 장기적으로 나가겠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외교·안보 정책은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가는 게 좋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또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 결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다른 나라들이 확대해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길게 잡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제가 아침에 건의드린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끝냈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신낙균 위원님, 김충환 위원님, 황진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중에 이미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박상천 위원님·박선영 위원님 그리고 홍정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은 신속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첫 회의를 준비하시느라고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을 비롯한 권종락 제1차관님, 그리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님, 그리고 많은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혹시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여러 외통위원님들 오늘 첫 번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답변보다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잘 경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라든가 외교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임했습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그리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한국국제교류재단,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구상찬	김충환	남경필	문국현
문학진	박상천	박선영	박주선
박 진	송민순	신낙균	안상수
윤상현	이미경	이범관	이상득
이춘식	이회창	정몽준	정옥임
정의화	정세균	진 영	홍정욱
황진하			

○청가 위원(2인)

권영세 정진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전문위원	지성배

○정부측 참석자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제1차관	권종락
제2차관	신각수
외교안보연구원장	이순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숙
차관보	이용준
기획조정실장	임재홍
다자외교조약실장	오준
통상교섭조정관	안호영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이혜민
대변인	문태영
에너지자원대사	조현
기후변화대사	정래권
재외동포영사대사	오갑렬
정책기획관	노광일
동북아시아국장	조태영
남아시아대양주국장	이경수
북미국장	장호진
중남미국장	두정수
유럽국장	김은중
아프리카중동국장	김진수
국제기구정책관	신동익
개발협력정책관	박강호
조약정책관	황승현
문화외교국장	배재현
재외동포영사국장	이정관
다자통상국장	이태호
지역통상국장	안총기

국제경제국장	최 재 철
FTA정책국장	최 경 림
FTA교섭국장	박 효 성
연 구 실 장	배 긍 찬
교 수 부 장	조 정 원
북핵외교기획단장	황 준 국
평화외교기획단장	허 철
부 대 변 인	조 윤 수
조 정 기 획 관	최 종 문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2008. 5. 30 정부 제출)

이상 3건 8월 27일 회부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8. 6. 30 김종률·강창일·김동철·김부겸·김영진·김유정·김진표·김충조·김효석·박기춘·박선숙·서갑원·장세환·전혜숙·조경태·조배숙·조정식·홍재형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2008. 7. 2 진 영·김소남·김학용·김희철·박종희·송민순·송영선·신지호·신학용·안상수·유기준·이범관·이한성·정두언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8. 7. 16 이명수·김용구·정희수·이상민·양승조·박상돈·이진삼·심대평·권선택·류근찬·이재선 의원 발의)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2008. 7. 4 황우여·한선교·유기준·신지호·조전혁·김소남·이경재·김효재·구본철·이한성·송영선·정양석·안상수·이종혁·박상돈·이화수·이정선·김성회·현경병·윤상현·이학재·진성호·조진형 의원 발의)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08. 7. 21 황진하·강석호·김성수·김옥이·김정권·김충환·나경원·박선영·박준선·손범규·안상수·안효대·양정례·유기준·유성엽·유정복·윤상현·이인기·이한성·전여옥·정갑윤·정하균·허원제·현기환·황우여 의원 발의)

領海및接續水域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8. 7. 22 송영선·이한성·유성엽·구본철·현기환·박종희·강석호·이진삼·나경원·김성순·이상민 의원 발의)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2008. 7. 23 이정희·강기갑·곽정숙·권영길·홍희덕·강창일·백재현·이미경·이용섭·이진삼·유성엽·최철국 의원 발의)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31 정부제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8. 8. 25 박상돈·권선택·김낙성·김성곤·김성순·김용구·김창수·김희철·노영민·류근찬·박선영·심대평·양승조·오제세·우제창·이명수·이상민·이영애·이용희·이재선·이진삼·이회창·임영호·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9건 8월 29일 회부됨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8. 7. 10 송영선·이한성·정하균·정영희·백성운·손범규·유성엽·이혜훈·김우남·김성수·김동성 의원 발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8. 7. 22 송영선·이한성·유성엽·구본철·현기환·박종희·강석호·이진삼·황우여·이해봉·김성순·이상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

(2008. 9. 3 송민순·강기정·강창일·고승덕·권영진·김성곤·김재균·김재윤·김종률·김충환·김효석·김희철·문학진·박선영·박영선·박주선·변재일·송영길·안규백·안상수·양승조·우윤근·유성엽·이광재·이미경·이성남·이용섭·이윤석·이춘석·장세환·전혜숙·조원진·최문순·최영희·최철국 의원 발의)

9월 4일 회부됨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이상 8건 2008. 6. 25 정부 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2건 2008. 7. 18 정부 제출)

이상 10건 8월 29일 회부됨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 및 반환 촉구 결의안

(2008. 7. 22 정갑윤·허태열·김소남·이성헌·김종률·김무성·이철우·정희수·정해걸·김을동·현경병·황영철·배은희·이명수·김옥이·양정례·장윤석·허범도·안상수·홍장표·윤상현·박대해·김동성·한선교·장제원·허천·김성회·정양석·김세연·박종희·김정훈·유성엽·김학송·최구식·박민식·이진삼·김태환·이한성·장세환·원희목·이시종·김효재·구본철·신지호·이진복·여상규·김충환·조경태·송광호·유재중 의원 발의)

8월 29일 회부됨

정부의 대북관계 개선과 긴급식량지원 촉구 결의안

(2008. 7. 11 정장선·강기정·강성종·강창일·김동철·김부겸·김상희·김성곤·김성순·김세웅·김영진·김우남·김유정·김종률·김진표·김희철·노영민·문희상·박기춘·박병석·박선숙·박은수·백원우·변재일·서갑원·송민순·송영길·신낙균·신학용·안규백·안민석·양승조·오제세·유선호·이강래·이광재·이미경·이석현·이성남·이시종·이용삼·이용섭·이종걸·이춘석·장세환·전병헌·전혜숙·조영택·조정식·주승용·천정배·최문순·최영희·최재성·최철국 의원 발의)

9월 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설치법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

(2008. 7. 4 송민순·강창일·김성곤·김우남·김희철·박상은·박선영·박종희·변재일·서종표·송훈석·안상수·양승조·양정례·우윤근·우제창·이광재·이미경·이윤석·장세환·전혜숙·정하균·조영택·최인기·홍장표 의원 발의)

9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